

월간 경실련

시사포커스 1

관(官)출들의 봐주기가 세월호 참사 불렀다

통일마당

문제 해결보다 문제 확인에 그친 오바마의 한일 순방

국제개발리포트

실현가능성에 주목한 'Good Enough Governance'



지방자치 시작은 투표로 부터

커버스토리

지방자치 시작은 투표로 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꽃, 6.4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기 위해 투표가 먼저다.
 우리 동네를 4년간 맡길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7장의 투표용지에 당신의 빨간
 도장을 채울 후보! 후보선택도우미로 찾자.



시민운동 종합정론지 2014_5, 6월호 | 월간경실련 통권 140호

경실련 | 공동대표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중앙위원회의장 박상기 상임집행위원장 김호균 정책위원장 채원호 사무총장 고계현
 월간경실련 | 발행인 고계현 편집인 윤순철
 편집기획위원 권오인 김삼수 김한기 남은경 윤철한 안세영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전화 02)765-6400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2014년 5월 27일 발행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5-6400 Fax : 82-2-741-8564-5 http://www.ccej.or.kr

CONTENTS

도시사

10 당신의 도시는 안녕하십니까? / 류중석

동승동칼럼

16 대통령의 국정운영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 고계현

기획특집

- 20 6.4지방선거 특집
 - ①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가 선택을 도와 드립니다 / 유애지
 - 26 ② 6.4지방선거 5대분야 24개 핵심정책과제 / 김삼수
 - 30 ③ 서울교육의 수장, 제대로 알고 짚자! / 정택수

시사포커스

- 34 ① 관(官)출들의 봐주기가 세월호 참사 불렀다 / 이기웅
- 37 ② 모든 규제가 암(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한기

통일마당

40 문제 해결보다 문제 확인에 그친 오바마의 한일 순방 / 김근식

안녕하세요? 회원님!

44 [인터뷰] 에이미 회원
 직접 본 빈곤현장, 관심과 실천으로 이어지다 / 최예지

경실련 사람들

46 [인터뷰] 손희준 6.4지방선거 공약검증단장
 "지방재정, 주민 관심으로 바꿀 수 있다" / 안세영



34 시사포커스 1
 관(官)출들의 봐주기가 세월호 참사 불렀다



40 통일마당
 문제 해결보다 문제 확인에 그친 오바마의 한일 순방

지역이야기

50 KT&G면세담배 불법유통, 조세정의는 어디에? / 최혜자

문화산책

52 초연한 척했던 나도 유죄 / 박지호

경제기사 다시읽기

54 300억 연봉, 떼뺏히게 받으려면? / 이기웅

동승동 책방골목

- 56 농부의 따뜻한 마음이 들린다 / 진유식
- 57 순종하는, 사람이 미래다 / 최승섭

국제개발리포트

58 실현가능성에 주목한 'Good Enough Governance' / 이주하

특별기고

62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기리는 길 / 김유찬

회원기고

65 갈등을 해소시켜준 '경실련 국제시민학교' 1기를 마치며 / 이재운

편집자에게

68 생소한 단어, 개념은 친절하게 풀어냈으면 / 안세영

회원게시판

70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72 경실련 일일보고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74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52 문화산책
 초연한 척했던 나도 유죄



58 국제개발리포트
 실현가능성에 주목한 'Good Enough Governance'

당신의 도시는 안녕하십니까?

류중석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 <그림 1>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게을리 한 결과물인 성수대교 붕괴사건

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로 비탄에 잠겨 있다.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들떠 있었던 것이 엇그제인데,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그동안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발부터 최근 리조트 지붕붕괴와 세월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제 나라 전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

사고 공화국의 현주소

1993년 서해 페리호 침몰로 292명 사망, 1994년 한강 성수대교 붕괴로 32명 사망,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발로 101명 사망, 같은 해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 사망,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190명 사망, 올해 2월 경주시 리조트 지붕붕괴로 10명 사망에 100명 부상.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이어지는 역사가 바로 사고 공화국



▲ <그림 2> 삼풍백화점 붕괴

국의 현주소이다. 전쟁도 아니고 테러도 아닌데 백주 대낮에 건물이 붕괴되고 다리가 끊어지고 여객선이 침몰하여 수백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다. 매번 정부에서는 안전대책을 요란하게 내놓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점검하는 데 인색했다. 어디에서부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우리의 도시는 과연 안녕한 것일까?

삼불(三不)의 도시

1970년대부터 성장신화를 써내려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잘 나가는 나라였다. 전쟁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부지런하게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모범을 전세계에 보여주었다. 인구 40만의 분당 신도시를 5년만에 똑딱 건설한 나라. 아마 이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세계적인 기록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늘날의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잉태한 빨리빨리병과 적당주의 병이라는 악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결과 우리의 도시는 불안(不安)하고, 불편(不便)하며, 불쾌(不快)한 이른바 삼불(三不)의 도시가 되어버렸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첫째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압축성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증가한 도시인구는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오염문제를 낳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건설, 기반시설 확충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공무원이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당시의 사회분위기였다.

둘째로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과다하게 조절함으로써 온 국민을 부동산 투기의 열풍 속으로 몰아갔다. 신도시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고, 재개발·재건축 열풍은 주택을 거주 수단이라 아니라 투자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재개발단지의 조합장은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것이 다반사였고 그 이면에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건설회사와 조합 간부들간의 유착이 있었다. 당연히 쾌적한 삶을 가꾸는 일보다 빨리 짓고 빨리 사고 팔아서 큰 시세차익을 보는 것이 지상과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은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

셋째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속에 빨리빨리주의와 적당주의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는 사실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과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규정과 절차를 잘 지켰는지는 따지지 않고, 결과물로 능력을 판단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하고, 무리해서라도 토목공사의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면 표창을 받았다. 전문가인 엔지니어의 의견보다 정치인의 의견이 우선시되어 정치공약으로 내건 신도시 건설 완공년도는 엔지니어들이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하는 지상과제가 되었다.

불안한 도시

이제 우리의 도시를 불안하게 만든 몇 가지 사고를 되짚어 보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과다하중 문제, 그리고 건물의 붕괴징후에 안이하게 대처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사건이다.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려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면밀한 진단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삼풍백화점의 용도변경은 이러한 정밀검토과정이 결여된 탁상행정의 결과였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정책에는 이러한 함정이 숨어 있다. 행정편의를 위한 쓸데 없는 규제는 당연히 사라져야 하지만 규제완화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규제도 덩달아 사라지게 되어 불안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사건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게을리 한 결과물이다. 당시 한강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과 인력은 정상적인 교량성능을 유지하기에

는 턱없이 부족했으나 아무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았다. 교량위를 통과하는 과적트럭에 대한 단속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교량이 정상 수명을 다하기 전에 피로가 누적되어 결국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다.

씨랜드 화재사건은 인허가 비리가 빚은 사고이다. 청소년 수련시설로 부적합한 곳에 허가를 내줌으로써 사고를 자초하였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관리능력이 미흡한 지자체가 화재예방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감독에 소홀한 결과 나타난 인재이다. 그밖에도 해마다 여름 장마철에 발생하는 침수피해는 복구예산 집행이 늦어져서 지난해 홍수피해가 완전히 복구되기 전에 또다시 홍수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그림 3> 씨랜드 화재사건



▲ <그림 4>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수해

불편한 도시

불편한 도시는 인간을 무시하는 도시이다. 대부분의 도시 가로는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되어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육교와 지하도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이용하기에 너무나 불편하다. 램프가 설치된 육교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도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한강변의 아파트 단지에서 다양한 여가시설이 있는 한강변 둔치로 나가는 통로는 어두침침한 콘크리트 박스로 되어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시 서둘러 88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인간을 위한 배려를 충분히 하지 못한 까닭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광화문의 이순신장군 동상, 국보 1호 남대문은 보행자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보행접근성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보물 1호인 동대문은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서울의 대중교통인 지하철은 깨끗하고 저렴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자가용 차량의 도심진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양재역 등 거점지역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하였지만 이용요금이 비싸고, 주차장

▶ <그림 5>
한강변아파트



에서 지하철까지의 보행연계성이 불편하여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도시의 곳곳에는 아직도 사람을 위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하다.

불쾌한 도시

불쾌한 도시는 볼 품 없고 설 곳 없는 도시이다. 파리의 세느강이나 런던의 템즈강과 서울의 한강을 비교해보면 한강변에는 저 혼자 잘 난 아파트들이 너도나도 한강을 조망하기 위해서 뻣뻣하게 늘어서 있다. 한강 주변에 볼 거리가 너무 없어서 한강 유람선이 세느강의 '바포 무슈'만큼 인기를 끌지 못한다. 남산의 경관을 위해서 외인아파트를 폭파한 사건은 우리나라의 건설사에 길이 남을 업적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단발성 행사로 끝나고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한강 주변의 도시경관은 불쾌한 도시경관으로 남아 있다.

주거단지를 건설할 때 녹지비율은 규정에 맞게 설계하지만 정작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인가는 따지지 않는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대상지 경계선 부근에 있는 자투리 땅을 녹지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녹지비율 규정은 충족시키겠지만 이러한 땅은 제대로 된 휴게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고 조경공사도 대충대충 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생활 속의 녹지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삼안(三安)의 도시를 위한 기본 다지기

세월호 참사는 우리들에게 기본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불안하고 불편하며 불쾌한 삼불(三不)의 도시를 안전하고 편안하며 안녕한 삼안(三安)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쳐야 할 것인가?

도시의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투기의 대상이었던 부동산은 삶터가 되어야 하고, 잠자고 나면 현 집이 새 집으로 바뀌는 도깨비 방망이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으로 거듭나야 한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우리 모두가 나의 삶터를 가꾸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건설분야는 원칙과 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모범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기업환경은 더 어려워졌지만 이러한 위기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고 기본에 충실한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했던 부당한 하도급 비리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

결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이 그 나라의 안전수준을 결정한다. 나부터 빨리빨리주의와 적당주의를 척결해야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이 높아진다. 이제부터는 한 번 일어났던 사건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안전하고, 편안하며, 안녕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나아가자. **정**



▲ <그림 6> 남산외인아파트 철거전



▲ <그림 7> 남산외인아파트 철거후



대통령의 국정운영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 자책으로 보낸 5월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 수 백 명을 충분히 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내몬 처참한 상황은 비단 참사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오늘을 사는 어른들 모두는 자기 책임인양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참사의 원인에 대해 말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문제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철저히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대로 이번 참사는 선원들의 무책임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보다 근원은 운항하기 어려운 여객선을 운항하도록 만들어준 이른바 관피아와 민간 해운사와의 유착비리를 통한 관리감독의 부실과 규제완화, 그리고 구조과정에서 보여준 공무원들의 무책임, 무사안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적폐와도 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통령의 자세의 변화가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대통령의 국정운영 태도와 방식으로는 이러한 적폐청산은 커녕 용두사미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결도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감능력 없는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됩니다. 대국민담화발표에서 뒤늦은 눈물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는 대통령의 진정성보다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참사 직후 보여준 대통령의 태도가 고인이 된 어린 학생과 피해 가족들의 슬픔에는 무감각한 채 일상적인 행정과정에서처럼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딱딱하고 권위적인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참사직후 피해가족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고 '공감능력이 없는 차가운 사람'이라는 평이 나돌겠습니까. 같은 여성지도자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정파를 떠나 국민들에게 왜 사랑을 받는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국민들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그 지도자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은 국정전반에 대한 무한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살인행위를 저지른 자로 표현하며 자신의 책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다.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다른 돌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선 질타할 뿐 정작 자신의 책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다. 오죽하면 '본인과 상관없다'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에 '유체이탈식 발언'이라고 비판의 소리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대통령 자신은 일반 공무원들과 지위와 격이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중 최고 책임자는 자신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국민들에게는 무책임한 지도자로, 자신을 도와 국정을 진행해야 할 공무원들에게는 국정운영에 대통령과 같이 간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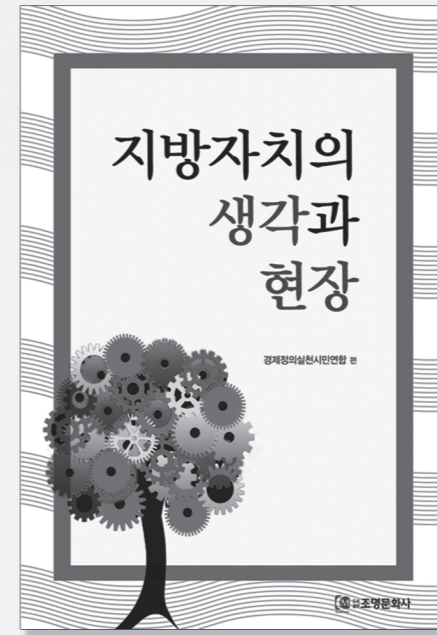
만기친람형 계알지시 또한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큰 방향과 흐름은 잡아 주되, 각 부처 장관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책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알지시는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업무추진을 막습니다. 대통령만 바라볼 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나서지 않습니다. 다 챙겨서 지시하니 지시하지 않은 일을 해서 공언히 욕만 들을

까 책임지지 않고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만 말하고 참석자들은 고개 숙이고 수첩에 적고만 있는 모습은 현재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자신들이 기본으로 해야 할 일까지 스스로 해내지 못한 것은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주위를 수직적으로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만하는 검사, 군인들과 같이 직역 측면에서 편중된 인사를 지양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이른바 '육법당' 냄새가 짙습니다. 검사와 군인은 수직적으로 정해진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명령에 충실할 뿐 복잡한 이해당사자들의 조정이나 입장을 달리하는 집단과 개인에 대한 설득과 합의에는 서투른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와 군인출신들이 현재 대통령 주위에 너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여유나 유연성이 없고, 정치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과 개인에 대한 공간적 접근이나 배재적 태도도 이러한 구조에서 연유할 것 입니다. 대통령 주변은 항상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어야 국정운영이 경직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원인진단과 후속대책 실천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선진사회도 비정상화의 정상화도 이 문제를 두고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통령 혼자 할 수 없고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 속에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의 변화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적 변화도 불가능함을 박 대통령은 알아야 합니다. **경**

경실련의 새책



한국에는 지방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

한국에는 지방선거도 없다!

“201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의 이론과 현장의 이야기를 담았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론가들이 기술한
지방자치 철학과 비전에 대한 논의와
지역경실련이 실천한
지방자치 현장의 현안까지
지방자치 이론 뿐 아니라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가 풍부하게 펼쳐진다.

지은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가격: 18,000원 ISBN 978-89-7257-419-4 93340

지방선거, 나와 통하는 후보를 찾아라!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가 선택을 도와 드립니다

유애지 정치입법팀 간사
aejiyu@ccej.or.kr



▲ 후보선택도우미 QR코드

6·4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는 이전과 같지 않다. 유권자가 후보들을 파악할 기회·시간 등이 적어 어느 때 보다 후보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선택도우미'를 가동한다. '후보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이 정책 현안 질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면 후보들의 답변과 비교해 최종적으로 후보와의 정책 성향 일치도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경실련은 분야별 주요 현안과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 6·4 지방선거 17개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4개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 각각 50여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받아 그중 유권자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할 질의 20개를 '후보선택도우미'

질문으로 선정하였다.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홈페이지(vote.ccej.or.kr)을 방문하여 질의 문항에 대해 '찬성/반대/모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게 되면 자신과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답변만 살펴보기로 한다. (찬성은 ○, 반대는 ×, 모름은 △로 표시했다.)

▣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지자체 파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몽준 ○ 박원순 △

정몽준 후보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도 이유는 밝히지 않고 찬성했다. 박원순 후보는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해 강력한 무책임한 재정운용을 방지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국가사업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광역·기초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정몽준 × 박원순 △

정몽준 후보는 광역·기초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폐지도 별다른 이유는 밝히지 않고 반대한다고 답했다. 박원순 후보는 일부 지역의 경우 지방권력 독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3선 연임 제한이 지역독점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신진세력의 진출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연임 제한을 의식해 단체장들이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해 행정공백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등 자치단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

정몽준 × 박원순 △

정몽준 후보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박원순 후보는 모름을 선택했다. 박원순 후보는 도입 필요성은 있으나 인사청문회 제도적 규범이 미흡함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정몽준 ○ 박원순 △

정몽준 후보는 원칙적으로 폐지에 찬성하나 위헌논란 등을 감안, 상향식 공천으로 사실상 공천 폐지의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박원순 후보는 이미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했던 바 있는 문제라며 정치적 합의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해 모두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정몽준 × 박원순 ○

정몽준 후보는 사회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박원순 후보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은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 4대강 사업으로 환경폐해가 심각하므로 설치된 보의 철거 등 강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몽준 × 박원순 △

정몽준 후보는 환경폐해가 심각하는 것은 일부 주장이라며 주민들은 과거에 비해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많다고 밝혔다. 박원순 후보는 한강의 자연생태계 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강보 철거 여부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 입장을 보였다.

▣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몽준 × 박원순 ○

정몽준 후보는 연일 지속되는 전세 가격의 상승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임대료 규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전세대란을 막으려는 정책보다는 전세수요 분산이나 세제 혜택 등을 활용해 주택 거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확대를 이유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 더 좋은 의료서비스 도입을 위해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

정몽준 ○ 박원순 ×

정몽준 후보는 국내의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통한 국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했으나 박원순 후보는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자사고)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몽준 ○ 박원순 △

정몽준 후보는 특목고와 자사고로 인해 본래 목적과 달리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평준화 강화 원칙 하에서 단계적·실질적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자사고·특목고와 일반고 사이에 불균형 또는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조건 폐지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몽준 ○ 박원순 ×

정몽준 후보는 9,000억을 투자한 경전철 시범사업 공사가 늦어지면서 기회비용을 포함해 2~3천억의 비용이 추가 발생되었다면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개선 및 혼잡도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전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시장 재임 중에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안으로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며 추진 계획 철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미대사관 숙소부지의 호텔 건립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정몽준 ○ 박원순 ×

정몽준 후보는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호텔건립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지만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미대사관 숙소부지는 역사·문화적 공간이라는 점과 학교들이 인접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 부지에 호텔 건립만이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종합심사제가 아닌 최저가낙찰제를 유지해야 한다.

정몽준 × 박원순 ○

정몽준 후보는 가격 외에 사회적 책임점수를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박원순 후보는 최저가낙찰제 유지에 찬성하면서 입찰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고 답했다.

▣ 한강 서해벚길(새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사업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정몽준 ○ 박원순 ×

정몽준 후보는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 급증이 예상된다고 서울 항구도시화를 통해 배로 한강과 서해-중국 등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경제


적 타당성 부족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관리비 증가 등으로 예산낭비 여지가 있는 청계천을 인공하천에서 자연하천으로 복원해야 한다.

정몽준 × 박원순 ○

정몽준 후보는 청계천이 시민의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가치가 높기에 예산소요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연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하수관로를 없애는 등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원순 후보는 생태환경을 회복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 삶을 보장함과 동시에 현재의 과도한 운영관리비용 지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찬성하면서 두 후보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나와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후보는?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육아, 교육, 주택, 교통, 일자리 등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모두 지방 행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투표해야 하는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라고 할 수 있다. 지금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vote.ccej.or.kr)에 내 지역 후보, 정책들을 확인해보자. 



지방‘통치’가 아닌 지방‘자치’로

6.4지방선거 5대분야 24개 핵심정책과제

김삼수 정치입법팀 팀장
peace@ccej.or.kr



6·4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각 정당의 공천이 늦어졌고, 깊은 슬픔과 분노, 국민적 애도가 이어지면서 예년과는 다르게 조용한 선거가 전개되고 있다. ‘안전 이슈’가 부각되고는 있지만, 우리 지역에 누가 출마하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고, 지역의 미래도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책임과 능력을 가진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똑똑히 보았다.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고, 올바른 판단과 선택에 나서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공약 파기, 불통에도 높은 지지율, 어떻게 볼 것인가?

흔히들 “한국에는 지방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에는 지방선거도 없다. 중앙정당이 지방선거에 개입하면서 지방선거를 중앙선거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와 똑같이 불신과 혐오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중앙정치의 불모로 전략한 지방자

치는 각종 부정부패와 끊이지 않는 예산낭비 사례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또다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 불공정 경선 시비, 금품 살포 적발 등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동안 정당들은 정당공천에 따른 부패·비리, 무능 등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약속한 적이 없다. 정당이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공천을 더 이상 신뢰할 수는 없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사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 공천결과를 두고 지역발전에 가장 적합한 자질을 가진 자가 공천됐다고 믿을 근거도 전혀 없다.

이제 지역을 복원하고, 지역문제를 지역의 시각에서 해결하는 등 지방자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 혁명만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실현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적격성을 정당공천에 상관없이 백지상태에서 검토해 투표해야 한다. 깨어 있는 유권자 의식만이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지방정치인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주민들은 후보들의 각종 공약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목표와 방향, 구체적인 일정 계획, 재원마련방안 등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나서야 한다. 후보들 역시 상호비방이나 헛공약 남발 등 바람직하지 못한 선거행태에서 벗어나 정책비전을 명확히 하고, 자신이 고안한 정책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적 근거와 실행계획을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많은 후보들이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네거티브 없는 선거, 유세차 없는 선거를 표방하고 있다. 선거분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정책과 공약까지 실종되어서는 안 된다. 후보들은 묻지마식 투표가 되지 않도록 정책·공약이 제대로 알리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민들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아래로부터 시작해 국가를 바꾸는 혁신의 원천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예측되는 것을 막고, 주민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의 운동기조를 “지방자치를 지방으로”라고 정했다. 중앙정치화를 차단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이뤄지고, 일자리·주거안정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를 지방으로”

지난 4월 14일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가 공식 발족하면서 ‘5대 분야 24개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자치와 분권 ▲재정분권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정책 ▲도시계획/주택·부동산 정책 등이 그 내용이다. 6·4지방선거가 중앙논리가 아니라 지방논리로 진행되고, 지역발전정책을 지역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실한 요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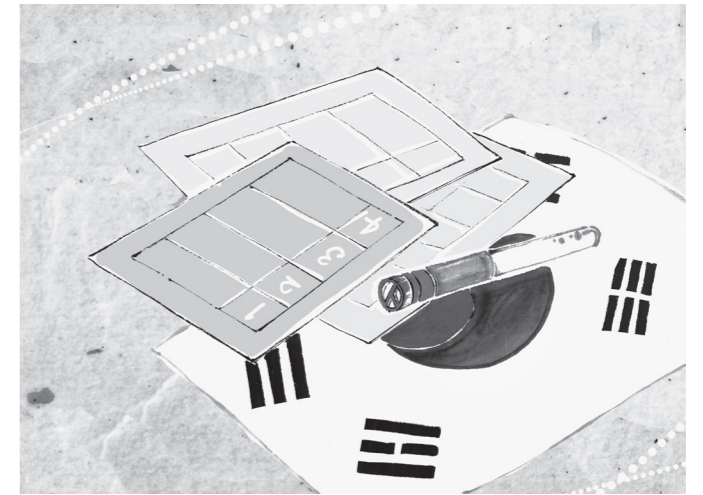
첫째, ‘자치와 분권’ 분야는 ‘중앙에 대한 요구’와 ‘지역에 대한 요구’로 나뉜다. ‘중앙에 대한 요구’는 지방의 정책입법권 강화와 재정권한 이양과 확대를 통한 분권적 행정구조로의 전환, 기능·사무재배분과 세제개편 등을 통한 재정분권, 위임사무의 폐지, 주민자치의 실질화, 교육자치,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실시 등이다.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체제를 지방분권적인 운영체제로 재편성하는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였다. ‘지역에 대한 요구’는 정책실명제 확대 및 정책평가제 실시, 독립적인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상시갈등조정기구 구축 등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재정분권’ 분야는 지방정부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동원할 수 없는 구조에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개혁, 지방세 세입기반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구분회계 시스템구축, 재산과세의 보유과세 강화와 과표 현실화,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조치 개편 등을 세부과제 이행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는 고용없는 저성장(jobless growth)으로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은 매우 시급하다. 사회적경제 지역협의협력체의 구성, 사회적경제 진흥기금 조성 등 사회적경제를 보완적·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시장경제의 보완적인 영구적 구조로 인식하는 정책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주민밀착형 기업육성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정책도 절실하다.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아동·노인 돌봄 서비스 등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예산 강화 등도 요구된다.

넷째, ‘복지정책’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 수준의 심각성에 따라 출산장려정책과

고령화에 대처하는 정책대안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을 이용자의 30%수준까지 향상해야 하며, 현재 3%에 그치고 있는 공공 운영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을 확충하여 10%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필수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고 혼합진료 금지원칙을 도입하는 등 비급여 없는 공공의료로 실현해야 한다.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개설도 시급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주택·부동산 정책’ 분야는 지자체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혈세낭비와 특혜제공의 문제가 지속되는 민자사업의 감시역량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자사업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정보 상시공개 의무화도 필요하다. 지자체 발주공사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를 통한 예산절감이 필요하며, 지역 개발공사가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도 공영개발을 강제해 지역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외 부동산 과표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 등 주거권 강화도 요구된다.

지역 경제와 주민생활이 먼저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있다. 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주민의 복지와 편익이다. 좋은 지방정책을 선택한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지와 편익이 증가될 것이고, 나쁜 정책을 선택한 지방정부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주민이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통제를 해야 하는 이유다. 좋은 정책을 펼친 지방정치인은 선거에서 다시 당선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주민에 의해 퇴출당함으로써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이 가장 우선시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경**

지역경제

2014년 5월 6일호

서울교육의 수장, 제대로 알고 짚자!

2014 서울교육감후보 초청 공약 토론회 현장스케치

정택수 사회정책팀 간사
wildwyld@ccej.or.kr



▲ 2014 서울 교육감 후보 초청 공약 토론회

- 일시 : 2014.5.21.(수) 13:00-17:00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주관 : 서울교육감시민선택
- 주최 : 월간 좋은교사
- 패널 : 김진우 좋은교사 공동대표,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남은경 경실련 국장, 황우승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자문위원
- 프로그램
 - 13:00-13:40 고승덕 후보 토론
 - 14:00-14:40 조희연 후보 토론
 - 15:00-15:40 이상면 후보 토론
 - 16:00-16:40 문용린 후보 토론

다가오는 6월 4일은 각 지역의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선출하는 날이다. 우리국민은 오래 전부터 교육의 관심과 열의는 높은 반면에 교육감 선거는 관심과 집중도가 떨어진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경실련은 교육감후보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이라는 연대체를 꾸렸다.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을 공개질의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여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초 공약에 대해 서면질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5월 21일에는 보다 심도 있게 공약에 대해 질의 하고자 4명의 교육감 후보자를 모두 초청하여 '서울시 교육감 후보초청공약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후보자별로 파트를 나누어 패널들이 돌아가며 후보자에게 공약을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고승덕 후보, 불필요한 예산 감축으로 학교환경 개선 계획

첫 번째 질의응답은 고승덕 후보의 순서로 시작되었다. 고승덕 후보는 학교환경개선 예산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선 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천억 정도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천오백억 원 정도를 지원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고승덕 후보는 현재 초등돌봄교실에 대하여 크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돌봄교실의 개선책으로서 예산마련을 통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열악한 돌봄교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학교주변 호텔건립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한 패널의 질문에는 유해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것은 현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친환경무상급식의 경우 현재 충분한 생산지 검사가 부족하고 유통구조가 독점화된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생산지검사의 강화와 가격결정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희연 후보, 선행교육금지조례 추진 의지

두 번째로는 조희연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조희연 후보는 선행

교육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학원에 대해서도 단속을 추진하고, 학생에게도 벌칙을 부과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일과 유사하게 학원휴일휴무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주말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겠다고 하였다.

돌봄교실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패널의 질문에 조희연 후보는 돌봄교실을 포함한 교육복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과도한 예산부담을 일으켜 교육청 예산을 잠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교육복지와 같이 중요한 영역은 교육청과 같이 하위 단위가 아닌 중세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공론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의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노후학교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가 불가능하므로 현 교육감이 2조원의 예산을 추계하여 정부에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답하였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서울시와의 공조를 통해 친환경 급식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하였다.

이상면 후보, 친환경 무상급식 저비용 고효율로 개선

세 번째로 질의응답에 나선 이상면 후보는 선행교육금지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선행교육은 우리사회의 암과도 같은 존재로서 개선을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돌봄교실의 현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돌봄교실은 정규과정이지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 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며, 돌봄교실과 방과 후 교실이 함께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로 애정과 정성을 가지고 협조체제를 꾸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학교시설개선 관련 예산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시설개선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예산은 의회와의 정치를 잘 함으로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유해시설 건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저비용 고효율의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였다.

문용린 후보, '교육격차 따라잡기'의 핵심은 토털케어


마지막 질의응답에는 현 교육감인 문용린 후보가 나섰다. 문용린 후보는 현직 교육감인 만큼 서울 교육 및 교육청 현황에 대하여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선행교육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선행학습이 공교육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학원도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하였다.

돌봄교실 운영현황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자 그간 서울교육청이 돌봄교실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하며 인력확충을 통해 앞으로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용린 후보는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교육 격차 따라잡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 토털케어 개념을 도입하여 돌봄으로서 채우지 못하는 추가 프로그램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 20만의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토털케어를 추진하기에는 추경예산이 부족하다고 패널들이 지적하자 지원을 차등적용을 하면 예산한도 내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 하였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문제에 대하여 교육청이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문용린 후보는 현행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현행법에 따라 호텔건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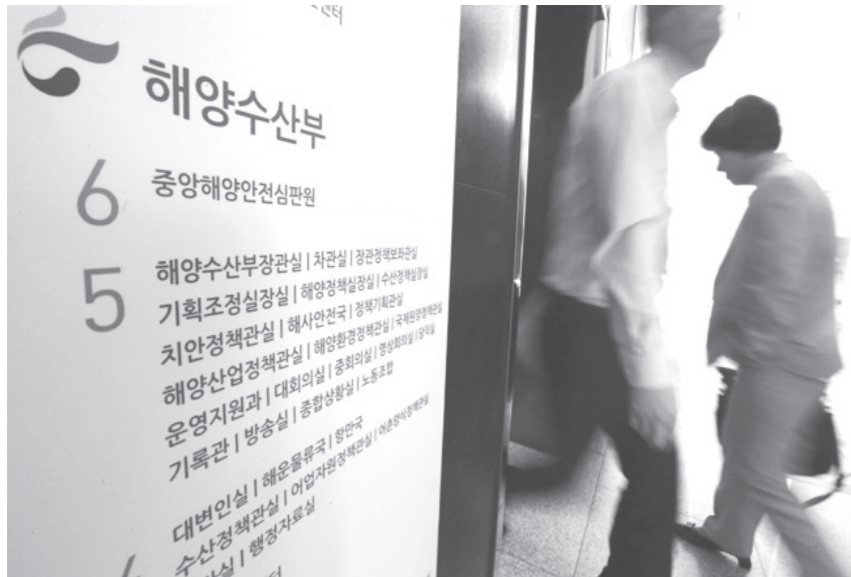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친환경 식자재는 평균 40%정도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재 친환경 재료사용 비율의 하한선을 70%에서 50%로 낮추었으며, 나머지 식자재는 농수산부가 인정하는 식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음을 밝혔다. 비록 하한선을 기존보다 낮추기는 하였지만 영양사의 의지에 따라 50%이상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님을 강조했다.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는 방대한 영역의 교육공약들을 다루며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진행 관계상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네 명의 후보자들을 한 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각 후보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제 얼마 뒤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서면질의와 토론회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약평가 결과가 능력보다 인지도에 좌우되고 있는 후보 지지율에 새로운 척도가 될 수 있길 바란다. 

관(官)출들의 봐주기가 세월호 참사 불렀다

해(海)피아- 민간협회 유착 관계 보고서

이기웅 경제정책팀 부장
leekiung@ccej.or.kr



경실련은 이들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들이 산하·유관기관의 주요보직을 독식함으로써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 민간협회가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작금의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주요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사망·실종자가 300여명에 달하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항해사의 조타미숙 등의 인재(人災)적 원인도 분명하나,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미흡 등 시스템 부실에 의한 관재(官災)적 요소가 상당하다. 이러한 관재의 원인은 이른바 해(海)피아로 불리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공무원들과 민간협회 및 조합 등과의 유착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양·해운 관련 민간협회와 관리·감독 기관과 얽힌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海)피아 민간협회 취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조사대상 민간협회 9곳에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법인등기 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한 해(海)피아 출신 등기 임원은 47명에 달했다. 또한, 각 협회나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임직원을 검색해 본 결과, 5개 민간협회에서 6명의 해(海)피아 출신 임원급 인사들이 추가로 나타났다. 미등기임직원을 고려하면 해(海)피아 출신 낙하산 인사의 숫자는 훨씬

많다는 얘기가.

한 예로, 한국해운조합의 법인등기 부등본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5명의 해양수산부 출신 인사들이 이사장 및 상무이사를 맡고 있었다. 현직에도 2명이나 재직중이었으며, 이 중 한명은 과거 국토해양부 제2차관 출신이었다. 이러한 해양수산부 출신 낙하산 인사들은 각종 이권사업들을 민간협회에게 위탁·대행 명목으로 이전하는 한편, 정부입법을 통해 위탁·대행 사업을 만들어 협회의 수입원을 보장해주고, 정부로부터의 관리·감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해 파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간은 퇴직 후 2년이고, 취업제한 내용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겸임 직업이나 교육 등 이른바 '경력 세탁'을 통해 무력화되면서 산하 또는 유관기관의 취업을 막지 못하고 있어 관료 출신의 유관기관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기간의 연장 ▲각종 협회나 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확대 ▲취업제한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가장 최근인 2012년 12월 18일 개정된 항만법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탁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위탁업무와 관리·감독 규정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해수부와 해운조합의 짝짜미가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이미 한국해운조합은 1961년 제정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각종 보조금 지급과 조세감면을 받고 있고, 정부 관리 공공시설의 우선사용권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경실련이 조사한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관할 15개 법률에 관계된 14개 민간협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들이 주요 민간협회의 주요보직을 독식함으로써 지도 및 점검기관과 민간의 산하·유관기관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향후 이 같은 관료 집단에 의한 유착과 그로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특정경제권

2014년 5월 6일

높여야 한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위촉직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사 7인과 정부 소속 공무원 4인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679건의 제한 요청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제한된 사례는 45건에 불과해 제한율이 6%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퇴직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유착을 막기 위해 직무 관련성이 높은 단계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록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윤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행정기구에 예속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윤리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입법화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위임·위탁 금지 및 위탁기관의 감독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위임 및 위탁에 대한 포괄규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응당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업무에 대해 하급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

에 위임·위탁하고, 이에 따른 일반적인 감독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6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6조 등 지휘·감독 및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업무를 수탁 받은 민간협회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사전에 감독해야 했던 공무원의 책임은 전혀 물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세월호 사고와 같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민간협회에 검사·감독 권한을 위탁함으로써, 민간협회의 검사·감독뿐만 아니라, 본래 정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법률로 입법화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대해 검사·감독 위탁을 금지하며 감독소홀에 대한 공무원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감독규정을 강화하며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수탁기관의 1차적인 책임과 함께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



모든 규제가 암(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규제개혁 10대 사례

김한기 경제정책팀 팀장
khk@ccej.or.kr

지난 3월 20일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7일 현장건의 후속조치로 48건의 수용 및 추가 검토 과제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셔야 할 원수"라고 규정하며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냈지만,



▲ 경북공원

기존 규제에 대한 엄밀한 평가 없이 모든 규제를 약으로 규정하는 마구잡이식, 기업들의 민원들 어주기식의 규제개혁 추진은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개혁은 기본적으로 효율성 증대와 경쟁촉진 등 공익의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의 효과와 혜택이 특정 집단이나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체감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공익적 입장에서 그 문제점과 폐해가 심각한 잘못된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10대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평

가 대상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중 기업 현장으로 규제 및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총 48건(수용 과제 41건, 추가 검토 과제 7건)이다. 평가 내용은 세부과제를 공익적 입장에서 규제개혁의 효율성과 경쟁촉진성이 증대되는지, 규제개혁의 결과로 특정 기업 또는 집단이 특혜를 받게 되는지를 중점으로 잘못된 사례를 선정했다.

잘못된 규제개혁 사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은 재벌의

〈표1〉 잘못된 규제개혁 10대 사례

	건의 내용	잘못된 규제개혁의 근거와 이유
1.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학교주변이라 하더라도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설립을 허용할 필요	교육권 침해와 역사·문화적 가치 훼손, 재벌대기업 사익 추구 특혜
2.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지속 적용되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 발생	아파트값 상승, 부동산투기 조장, 서민주거 안정 위협
3. 원격의료 허용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을 위해 원격의료 도입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효율성·안전성 검증 안됨, 의료서비스 질 저하
4.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 (영리자법인허용)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시 영리자법인 허용을 통한 애로 해소 필요	해외진출지원은 곧 영리자법인 허용, 공적의료체계 근간 훼손
5. 금융 PEF 관련 규제 개선	외국계 PEF에 비해 국내 PEF에 대한 규제가 과도	PEF를 활용한 재벌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6. 중소기업 지원 대상과 규모를 증진기업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기술축적과 성장을 유도	가업상속공제 지원 대상과 규모를 증진기업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기술축적과 성장을 유도	계속적 완화는 법적 안정성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저하, 세금 없는 부의 세습
7. 외국계투자기업 세무조사 애로 해소	투명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비정기조사를 실시할 필요	정당한 과세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본질 왜곡
8. 관광 면세한도 상향	국민소득 증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해외여행객 면세한도를 상향할 필요	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 아님, 전체 국민 15%에게만 혜택
9. 외국교육기관 어학연수 허용	국내외 학생에 대한 영어연수 프로그램 제공을 허용할 필요	고등교육기관이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 영어나교육 과열, 본래 설립 목적 달성 소홀
10. 여수산단 공장 부담 경감	여수산단 내 일부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시, 관련 부담 과중하여 경감방안 필요	비용과 편익 따지지 않을 경우 특혜 시비

사익추구 행위에 밀려 공공적 가치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만약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호텔이 이곳에 들어설 경우 교육권 침해는 물론,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될 것이다.

둘째, 선분양이라는 공급자 특혜 주택공급 구조에서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다. 여전히 주택이 가구자산의 70%가 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선분양을 유지하며 투기심리를 자극해 과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원격의료 허용은 대면진료와 비교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전성 확보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 원격의료의 일반화는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진료를 약물조절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합병증이나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놓치는 등 부작용



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째,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의 실제 내용은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합법화'하는 조치이다. 의료기관의 영리화는 공적 의료체계를 훼손시키는 과도한 완화이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재 성격으로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영리자회사를 만들 경우 수익의 상당 부분이 배당을 통해 사기업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환자 진료 자체가 영리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다.

다섯째, 금융 PEF¹⁾ 관련 규제 개선은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재벌 대기업이 제2금융권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고, 금산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완화는 재벌 대기업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여러 계열사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세제지원 확대는 개정된 세법의 개정효과를 제대로 분석할 겨를도 없이 또 다시 같은 제도를 대폭적으로 바꿔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은 조세형평성을 침해한다.

일곱째, 외국계 투자기업 세무조사 애로 해소와 관련, 국세청의 세원 포착을 위한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징세는 과세 관청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이란 명분으로 정부의 정당한 과세행위를 규제개혁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규제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여덟째, 관광 면세 한도 상향은 조세형평성을 저하시킨다. 실제 해외여행객 숫자는 연간 700만명이며, 이는 국내 인구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 국민의 85% 이상은 면세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아홉째, 외국교육기관 어학연수 허용은 고등교육기관이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돼 본래 설립 목적에 소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여수산단 공장 부담 경감은 규제개혁으로 보기 힘들다. 부담금은 사업자에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케 하는 제도이며 비용과 편익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재계 입장만 반영해 부담금 제도를 손떨 경우 오히려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경실련은 향후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무분별한 규제개혁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규제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1) PEF [Private Equity Fund] : 사모투자펀드.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의 펀드이다. PEF는 전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한 뒤, '바이아웃(Buy Out)'의 투자 전략을 취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1990년대 이후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는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에 활용돼 선순환을 불러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문제 해결보다 문제 확인에 그친 오바마의 한일 순방



▲ 지난 3월 25일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지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순방했다. 미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한번으로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방문은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진전된 것도 아니고, 일본의 일탈을 막아 꺾끄러운 한일관계가 개선된 것도 아니다. 단지 미일 양자 간 안보현안 챙기기와 한미 양자 간 북핵 압박 외에는 그다지 눈에 띄는 순방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북한 핵문제는 악화일로이고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는 주장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공언하며 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요구로 적극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번 순방 결과에서도 한미일은 북핵포기라는 원칙적 요구와 핵실험 시 추가 제재라는 경고만 내놓았을 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에는 조금도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대화를 요구하는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는 한미일의 형국이 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능력과 핵무장은 진전되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의 핵심요인인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번 순방은 해결이 아니라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미일 공동기

자회견장에서 서슴없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대상임을 확인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두둔함으로써 사실상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에 힘을 실어줬다. 미일 공동성명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향후 동북아 평화와 협력 대신 갈등과 대결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비판에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개선에 아무런 진전도 가져오지 못한 데에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즉 '재균형'(rebalancing) 전략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북핵문제가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협상이 재개된다면 동북아 정세는 대결이 아닌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6자가 모여 회담을 하고 북미, 남북, 북일 등의 양자협상이 다방면으로 진행되면 당연히 동북아에는 대화의 장이 서게 된다. 이럴 경우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면서 재균형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는 다소 버겁게 된다. 오히려 동북아에 대결과 대립이 구조화되고 북핵문제 악화로 안보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재균형 전략 수행은 훨씬 수월해진다.

북한이 핵능력을 증가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이른바 군사적 도발을 지속할 경우 미국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개입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실제로 6자회담이 진행될 경우에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반대로 6자회담이 중단되고 북한의 핵도발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개입은 더욱 정당화되었다.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국면에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서해에 진입시킬 수 있었다.





2013년 봄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전략 핵폭격기와 스텔스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핵항모를 보낼 수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 즉 중국을 견제하는 재균형 전략 수행에 이보다 나은 호재는 없을 것이었다. 결국 재균형 전략을 동아시아 상위전략으로 간주하는 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진전시키고 싶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예산자동삭감'에 따라 10년간 5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 삭감을 감수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을 유지하려면 현실적으로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절실하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나라가 일본임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과다. 미국의 국방비 감축을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별충하려는 전술적 계산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미국의 국방비 삭감분을 채워주는 미일동맹 강화는 그 대가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우경화를 눈감아주게 된다. 일본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폭발적 계기가 될 수 있는 센카쿠 문제에 미국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게 일본을 두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재균형 전략을 위해 북핵문제가 온존되고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은 당연히 일본의 심각한 우경화를 방지할 수밖에 없다. 센카쿠에 대한 노골적 편들기와 일본 우경화를 사후승인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 등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상 미일동

맹 강화가 필수적인 만큼 이를 빌미로 일본의 우경화 요구에 미국이 화답한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중일 대결 격화와 한일관계 악화로 나타난다. 미국에 중일 대결은 그리 나쁜 게 아니지만 한일 갈등은 내심 불편할 수밖에 없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와 재균형 전략을 완성하려면 한미일 군사협력이 상호 일체화되는 수준까지 확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MD 참여를 요구하고 위안부 문제조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내세워 봉합 차원의 해결을 강조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21세기 한국에게는 신냉전적 대결구도 대신 탈냉전적 평화협력 관계가 훨씬 절실하다.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 수정주의를 방지할 수 없고, 중국과 일본의 힘겨루기도 박수칠 수 없다. 더 큰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대결적 구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로 진전되는 게 우리에게 더 없이 유리하다.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에 휘둘러 대결 구도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한국이 나서서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핵문제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오히려 미국을 설득해서 6자회담 재개에 나서야 한다. 지금의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국면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만으로도 6자회담 재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북핵협상 재가동으로 대화국면이 조성되면 동북아에 대결 대신 협력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는 동북아 대결 구도에 기생하는 것인 만큼 동북아 협력의 기운은 장기적으로 일본의 잘못된 행보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북핵문제 진전은 실제 남북관계라는 신뢰의 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적극적 역할이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신뢰에 바탕을 둔 호응이 필요하다. 우리의 제안을 거부한 북한을 비난하는 데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에 치중하는 드레스덴 구상과 정치군사적 현안 논의를 주장하는 북한의 1월 16일 국방위 중대제안을 결합하는 차원에서 남북대화가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어진 자세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에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경**

※ 이 글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현안자료에 실렸습니다.

직접 본 빈곤현장, 관심과 실천으로 이어지다

에이미 회원 인터뷰

최예지 회원홍보팀 간사
cyj@ccej.or.kr

무한경쟁사회에서 빈곤퇴치와 국제협력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실천해온 회원을 만났다. 본명 대신 필명 '에이미'로 불려달라는 그녀는 1년간 개발NGO 현장 활동가로 일했다.



▲ 수국정원을 가꾸는 게 꿈이라는 에이미 회원

떤 분야인가요?

A. 아무래도 개발NGO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Q. 다양한 나라에서 생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A. 인도유학생이던 지인이 성추행범 대처법을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말고, 일단 지하철 내에서 소란을 피워 성추행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이를 보고 다른 인도아저씨가 와서 대신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인도여행 중에 텔리시내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지인이 알려준 데로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때 인도아저씨가 등장해서 성추행범을 대신 잡아준 적이 있습니다.

Q. 해외 경험이 많으신데 여행지로 추천할 만한 곳은 어디인가요?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 관심분야, 취미 등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A. 저는 현재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음악감상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Q. 경실련에 후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4년 전에 개발NGO 현장 활동가로 같이 일했던 선배의 소개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Q. 경실련 활동 중에 가장 관심 가는 분야는 어

A. 네팔의 포카라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숙박비도 저렴하고 싸고 맛있는 음식점도 많고요. 트래킹,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가 많습니다.

Q. 지금이라도 다시 살고 싶은 나라는 어디신가요?

A. 글썬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북유럽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북쪽지방에서는 오로라도 볼 수 있다고 하고, 뭔가 그 동네는 조용하고 한적할 것 같아요.

Q. 그라민 은행,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빈민을 위한 대출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A. 대학교 때 도서관 포털사이트에서 경제 관련 도서를 검색하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라는 책 제목이 눈에 띄어 빌려보게 되었고, 저자인 무하마드 유누스의 소액대출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Q. 빈민을 위한 무담보 대출이 빈곤퇴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A. 글썬요. 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외국 사례의 경우 무담보 소액대출이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빈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빈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들이어서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Q. 빈곤퇴치를 위해서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A. 혼자서 빈곤퇴치를 위해 실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발 NGO 단체 몇 곳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Q.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이 되는 기준은 어떤 것 인가요?

A. 지역 단체장들을 비롯해서 지역의원들은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섬기는 분이여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진심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바라고 기대하는 분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분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Q. 올해는 유난히 연휴가 많습니다. 연휴에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A. 특별한 연휴계획은 없고요. 일하느라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회원님께 경실련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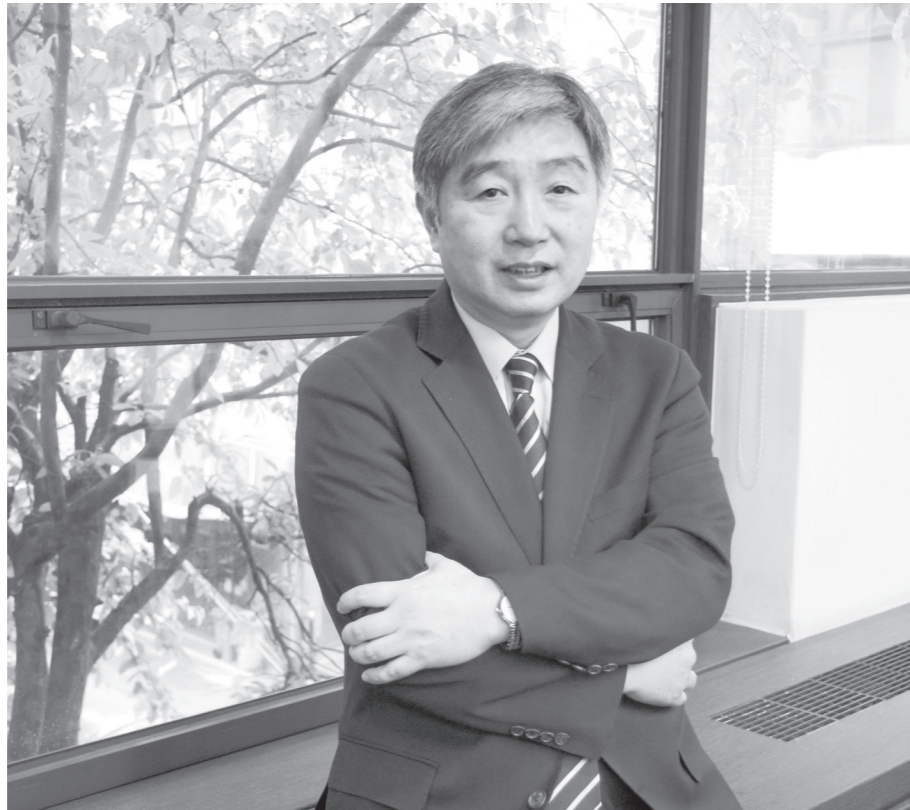
A.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은 생각하게끔 문제제기를 던지는 곳이 아닌가 합니다. **경실**

“회원인터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인터뷰 하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02-744-0400, member@ccej.or.kr

“지방재정, 주민 관심으로 바꿀 수 있다”

손희준 6.4지방선거 공약검증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인터뷰

안세영 회원홍보팀 간사
sy@ccej.or.kr



지난 4월 14일 경실련강당에서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공약검증단장으로 참석한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공약분석 및 평가한 내용을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손희준 단장에게 직접 물어봤다.

Q. 공약검증단장을 맡았다. 가장 중점적으로 검증할 사항은 무엇인가?

A. 이번 선거는 민선 6기로 주민직선제가 이뤄진지 20여년이 됐다. 진정한 지방공약을 얼마나 개발했는지 검증하고, 공약 개혁성, 실천 가능성, 로드맵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경합이 치열한 광역단위 지역에 대한 공약 검증 내용은 한국일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고, 공직선거법에 의해 점수화는 실행되지 않지만 후보자별 지표로 차별화시킬 예정이다.

Q. 2012년 대선 공약 중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는 공약은 무엇인가?

A.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 10대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보이는 공약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무상보육에 관해서는 역설적으로 강한 실천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기관위임사무를 발굴,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있다. 기존에 중앙정부가 이행하는 사무와 기능을 단순히 지방으로 위임하는 일에 중점을 뒀던 것과는 달리,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재정과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주목해야한다. 반면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대학 육성, 권역별 발전계획 등은 아직 미진하다고 본다.

Q. 반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공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당연 국민안심프로젝트 공약이다. 사실 유구무언이라 해

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국가재난처 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지방분권을 강화해야지만 제대로 된 안전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중앙에서 결정을 내리고 지방으로 전달되는 체계는 사다리만 많을 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도, 현장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같은 중앙기구는 현장의 조직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자원이나 정보, 기술, 물자를 총동원해 활동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그 역할이다. 중앙기구는 각 자치단체의 현장조직이 잘돼 있는지 감시감독하고 각 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줘야 한다.

Q. 주민직선제를 실시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 참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A.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시행된 결과, 뚜렷한 효과도 없고 재정만 더 많이 든다는 인식이 박혀 주민들 역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없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했던 학생자치활동, HR(Home Rule)은 학생들이 직접 교복, 두발 등에 대해 논의를 거쳐 규칙을 정하고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우리 국민들은 ‘자치’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면 주민들의 삶 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생각과 능력

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동네 버스 정류장이나 신호등의 위치를 주민의 의견을 모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Q. 최근 방만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방재정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지방에서 호화청사를 짓고 각종 지역축제를 하면서 재정운동을 방만하게 한다고 지적하기에 앞서 구조적인 문제부터 짚어야 한다. 가장 큰 원인은 평균 재정자립도가 50%인 수준에서 눈에 띄는 사업이 아니라면 중앙에서 예산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과시적 행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몇몇 지자체의 방만한 행태를 지방재정의 전체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느 물에나 미꾸라지 한두마리는 있기 마련인데 이 때문에 제도를 더 만들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까운 힘만 낭비하는 것이다.

Q. 그렇다면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A.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이 매년 이뤄지고 있다. 우리가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과 같이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재정에 문제가 나타나면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채 발행한도제도와 사전위기관리제도도 마련돼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정공시가 매년 이뤄지지만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단체 등이 예산 감시운동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유해서, 해당지역에서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주민 스스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학자들이 강조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학습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가 아닌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부예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Q.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A. 파산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가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파산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채를 청산하고 회생할 수 있는 자금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오는 방법 외에는 없다. 정부에서는 징벌적 의미에만 무게를 두고 파산제도를 도입하려고 할뿐 부채 해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갖춰진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91년 이후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쪽 떨어졌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A. 재정자립도는 세입총액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나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면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된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예산은 정해져있지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쓰고 싶은 곳에 스스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지시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자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도 도와줘야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갔다.

Q. 지방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A.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올해부터 지방소비세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인상되었다. 하지만 작년의 취득세 영구인하와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부담을 메우기 때문에 순증 효과는 없는 셈이다. 따라서 지자체 스스로도 지방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부족한 예산은 중앙으로부터 받는 교부세로 메우면 그만이라는 생각때문에 과세대상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Q.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개발공약이 남발하고 있다.

A. 대규모 국책사업은 중앙과 지방이 정확하게 비용분담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지자체에서 재원소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지방재정 악화 위험성이 있는 공약들을 마구잡이로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원자력 핵폐기물 시설과 같은 사업은 가장 적합한 지역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해 그에 따른 비용과 보상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현 시스템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결과물에 목말라 있는 지자체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거나, 유지관리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대규모사업을 따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앙에서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지자체 부담금을 높게 제시하는 쪽에 사업을 주는 식의 지방길들이기를 자행하고 있고, 이는 곧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Q.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가장 눈여겨볼 사항은 무엇인가?

A. 지나치게 중앙정치화되면서 지역 이슈들이 묻히고 있다. 결국 해당 지역의 문제를 각 후보자들이 공약에 얼마나 충실히 담고 있는지와 유권자를 어떻게 설득하는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방선거인만큼 각 지역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KT&G 면세담배 불법유통, 조세정의는 어디에?

최혜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지난 4월 인천일보에 의하면 담배 밀수 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면세담배가 국내에 불법 유통된 사실이 검찰에 포착됐다. 성인 1,648만 명이 동시에 한 갑씩 소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인천지검과 인천지역 식품 수출업체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KT&G에 외항 선원용 면세 담배를 수출용으로 구입한 뒤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인천세관에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담배를 컨테이너에 싣지 않고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2년2개월간 40여차례 빼돌려 유통한 면세 담배는 164만8,000보루로 갑으로 따지면 1,648만갑이다. 세금이 판매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유통구조에서 세금을 탈루할 경우 막대한 이익이 생기는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세금탈루 범죄라 할 수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한 면세담배는 인천지역 곳곳에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려나갔으며 불법으로 유통한 담배인만큼 지방세인 담배세는 물론 정당한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아 판매업소 들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시킨 면세담배를 금액으로 따지면 시가 350억원에 이르

고,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은 최소 1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담배 제조업체인 KT&G가 면세율1을 적용받는 외항 선원용 담배를 영세율2을 적용받는 수출용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 판매하기에 저지될 수 있었던 범죄다. KT&G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외항 선원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무단 용도변경 판매를 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면세담배 2,728만5,200갑을 불법 판매하였으며 이로 인한 탈세 추정 규모는 800억원에 80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이 적발되면서 알려졌다.

국영기업인 전매청이 전신인 KT&G는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상호를 변경, 공기업으로 운영됐다.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IMF 구제금융의 요구조건에 부응하기 위한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 계획'에 의해 2002년 민영화되었다. 2013년말 기준 기업은행이 최대주주(6.9%)이며, 외국인 지분 58.68%로 KT, POSCO와 함께 '민영화된 3대 공기업'의 하나이다. 수차례 공정위와 국세청의 압수수색과 세무조사, 부동산 사업관련 비리의혹 관련 경찰조사와 폐기담배 '레종레드' 불법유통과 비자금조성 의혹, 최근의 면세담배 불법유통 사건 등은 민영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면세담배는 국내담배보다 영업이익률이 2배수준이다. 갑당 원가는 330원이지만 국내 판매담배의 출고가 가격은 평균 500원이고 면세담배 출고가 가격은 평균 800원이다. 면세담배의 판매금액이 일반담배보다 1.5배 이상 비싸다. KT&G 전체 담배 중 면세담배 판매액 비중은 4% 정도이지만 영업이익에서 면세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 수준으로 면세담배 판매액에 따라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10년 이전까지는 일선 지점의 부분업무에 불과하던 면세담배 판매조직이 면세지점으로 승격되고 2012년 지역본부에서 본사직할체제로 변경했다. 2009년 4급이던 면세지점장을 2013년에는 1급으로, 관련자는 2급에서 영업본부장으로 직제 개편한 것만 보더라도 KT&G내에서 면세담배가 가지는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담배사업법 19조2항에는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KT&G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외항 선원용 이든 수출용이든 둘 다 면세 담배라서 어떤 용도로 판매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KT&G의 해명은 1948년 전매청 설립 이후 65년 가까이 담배사업을 영위했고, 담배사업법에 의해 사업을 하면서 면세용과 수출용의 제한을 몰랐다는 것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담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세금원이다. 또한 잎담배 농업은 농촌의 주요 사업이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급급한 KT&G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였다. 대기업의 욕심이 국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세금 탈세와 탈루는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KT&G 마음대로 외항 선원용 담배를 수출용으로 판매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국가경제를 흔드는 대규모 범죄는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KT&G가 지난 수년동안 면세담배의 비정상적인 판매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의혹이 공공연한 비밀로 세간에 회자되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KT&G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의도적으로 소득이나 이익을 누락시킨 탈루와 부정한 방법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KT&G의 탈세 행위는 조세법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므로 조세법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세법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한다. **정**

1) 면세 [tax exemption, 免稅] = 불완전면세, 면세는 조세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일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제도(非課稅制度)와 구별된다.

2) 영세율 [zero tax rate, 零稅率]세금 부과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것. 세금을 안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르다.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됨. 영세율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차이가 없지만 판매업자에게는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빵에 붙는 부가세를 면세해 주면 빵가게 주인이 밀가루를 사면서 낸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없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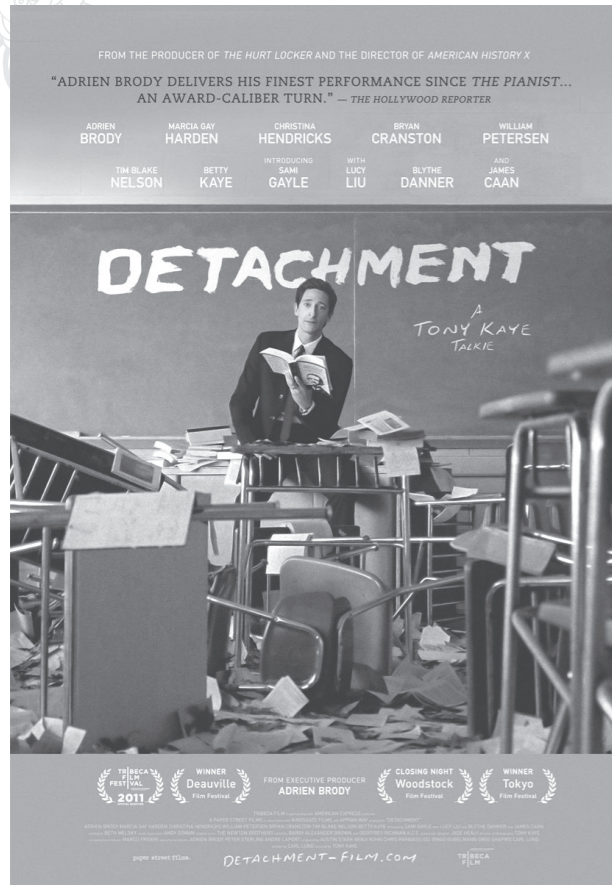
지역이야기

2014년 5월 6일

초연한 척했던 나도 유죄

영화 '디태치먼트(Detachment)'를 보고

박지호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jhpark@ccej.or.kr



들, 지금 괜찮은가요?”

디태치먼트의 사전적 의미는 분리, 초연, 무관심이다. 미국에서는 2011년에 개봉한 영화가 3년이 지나서야 우리의 곁으로 오게 된 것은 이 시기에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인 듯하다.

미국의 한 도시 외곽에 있는 고등학교에 헨리 바스(에드리언 브로디 분)가 부임한다. 그는 한 달짜리 기간제 교사이다. 헨리는 교사 중 평가도 높고 실제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교육체계 안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이다. 그의 교실에는 ‘중2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만 가득하다. 비단 헨리의 교실 뿐 만이 아니라 모든 교실에서 ‘수업’은 사라졌다. 선생님이 무얼 하든 신경도 쓰지 않는 아이들. 한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히틀러를 찬양하는 영상을 틀어놓기도 한다.

영화 속 학생들은 혼돈 속에서 방황한다. 문제는 선생님들 역시 방황을 한다는 것이다. 상담교사는 매일 같이 찾아오는 아이들을 버거워한다. 모두가 능수능란하다고 인정하는 노(老)교사는 사실 약으로 버티며 견디고 있었다. 전직 교사였던 한 사람은 매일 교무실로 전화해 아이들을 해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누군가

를 가르치는 직업의 고충을 적나라하게 배설한다. 선생님을 무시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학생을 퇴학시켰더니, 학부모가 찾아와 인종차별이라고 학교를 뒤집어 놓고선 선생님을 또 다시 무시하고 욕설을 내뿜기도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교육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교육체계의 붕괴, 성적제일주의, 팽배한 이기주의, 선생님의 자질 부족... 어떤 것이 그 원인이며 시작인지 규정할 수가 없다. 어쩌면 앞에 열거한 이유 전부가 원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의 발단은 ‘아이가 아닌 우리’에서 시작된다. 영화에 등장하는 선생님들도 ‘아이가 아닌 우리’에 속해있다. 사실 우리들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고 있는 듯하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임은 당연하지만, 아이가 아닌 우리가 불안하고 흔들리니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우리는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한다는 것이다. 또 인정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문제가 쌓인다. 모름을 인정하면 소통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 통로를 차단한다. 이유는 다들 제각각이겠지만 굳이 정형화해보면 아이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 아이러니에 웃음만 나온다.

때로는 과거의 안녕을 추억하며 아이들에게 과거를 주입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로 시작하는 훈계는 아이들을 고루하고 획일적인 틀에 가둔다. 반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주체의 동의 없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의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미래를 강제 주입하기도 한다. 틀 속에

갇힌 아이들과 내 꿈을 대신해주는 아이들을 보며 흐뭇해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감금과 주입 속에서도 막연한 무관심으로 아이들을 대한다. 학교와 학원에 보내주고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집에 들어오면 공부할 때 간식을 챙겨준다고 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지나친 자위다. 아이들의 생각과 고민을 ‘중2병’이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자신 또한 그 시절엔 지나치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수천 번의 포기과 실망에 괴로워했는데 지금 아이의 그런 생각과 고민은 방치하거나 무시한다.

이런 우리들의 행태는 차디찬 바다 속에 아이들을 버려두고 배에서 도망친 한 선장을 떠오르게 한다. 우리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부조리한 환경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도망치고 있다.

교육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이제 붕괴를 막아야 한다. 아이가 아닌 우리의 잘못과 착각을 직시해야 한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유죄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슬픔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영혼을 침잠시키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얼음 같은 냉혹함’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이를 바라보고 기다려줘야만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속 헨리의 흐느낌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에게겐 젊은이들을 이끌어줄 책임이 있어요. 그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하찮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우리가 하찮다고 아이들까지 하찮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한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님처럼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말해주는자.

“Carpe Diem!” 

300억 연봉, 뚝뚝하게 받으려면?

③ 등기임원 연봉공개

이기웅 경제정책팀 부장
leekiung@ccej.or.kr

지난 3월 31일, 재벌총수와 CEO들의 연봉이 일제히 공개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SK 최태원 회장이 약 3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다는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나머지 재벌 총수들과 전문경영인의 보수도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연이어 직원들의 평균 임금과 비교한 자료들이 언급되면서 이와 관련된 기사와 사설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①회사채와 CP의 차이, ②DTI와 LTV란?에 이어 세 번째로 논란이 되었던 등기임원 연봉 공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03.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31/0200000000AKR20140331146800008.HTML?input=1195p>

최태원 회장, 작년 보수 300억대 '슈퍼연봉 왕' 등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등기임원으로 있던 계열사로부터 300억원대의 보수를 챙겨 '슈퍼 연봉왕'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보수를 회사에서 지급받은 '슈퍼 연봉' 경영인이 10명 안팎으로 파악됐다.

31일 재벌닷컴이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등기이사(퇴직자·사외이사·감사 포함) 개인별 보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100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고액 임원은 1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업인 중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위를 차지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SK와 SK이노베이션[096770], SK C&C, SK하이닉스[000660] 등 4개 그룹 계열사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300억원 가량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2년에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으나 해당 연도의 계열사 실적 호전으로 작년에 받은 상여금이 200억원대에 달하면서 총 보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그러나 올해 주총에서 이들 4개사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 내년부터는 보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략)

지난해 4월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2013년 감사보고서 제출시 해당 기업에서 총 보수 합계가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2014년 3월 31일에야 대다수 기업들이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등기임원의 보수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4월 이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전

경련 측에서는 반기업정서를 부추기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해왔습니다. 반면, 경실련 등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장기업 중 5억원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에 한해 보수총액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이는 애초에 경실련이 원하는 방향도, 전

경련이 반대했던 방향도 아닙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의 연봉 공개보다 재벌총수의 연봉 공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전문경영인이나 재벌총수의 연봉 모두 재벌총수가 실질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재벌총수의 연봉이 어떻게 지급되는지가 가장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 연봉공개 의무대상을 '등기임원'에 한정함으로써 삼성 이진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 미등기 임원에 대해서는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SK 최태원 회장 약 300억원, 현대차 정몽구 회장 140억원 등 보수총액을 공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성과와 기준에 의해 천문학적 보수를 받는지 산정 기준과 내역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서는 이 부분

이 대부분 누락되었습니다. 많은 경영진이 성과급을 받으면서 그 성과급이 어떤 성과에 의해 산정됐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음으로써,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성과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보수산정 기준과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적정 보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잠재우고 재벌총수나 전문경영인의 고액 연봉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임원 연봉공개에 있어 5억원이상이나 이하이나, 또는 등기임원이거나 미등기임원이거나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임직원의 보수를 책정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재벌총수의 연봉, 산정 기준, 내역을 함께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야만, 건전한 기업경영 및 노동과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기업 문화, 노동 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

〈표1〉 오너 지난해연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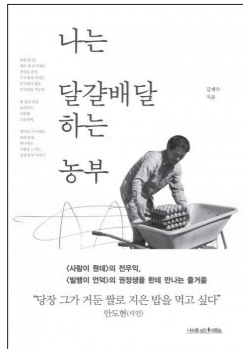
이름	회사·직책	연봉
최태원	SK 회장	301억500만원
김형섭	네파 전 부회장	201억9000만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140억원
김승연	한화 회장	131억2000만원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101억3032억원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	96억5000만원
조양호	한진 회장	62억1000만원
담철곤	오리온 회장	53억9100만원
최신원	SKC 회장	52억원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	50억3000만원
이재현	CJ 회장	47억5400만원
이용렬	코오롱 회장	47억1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45억1100만원
신동빈	롯데 회장	44억4100만원
구본무	LG 회장	43억8000만원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43억8000만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42억4100만원
조석래	효성 회장	39억500만원
허창수	GS 회장	38억9200만원
최재원	SK 부회장	38억원

* *는 퇴직금 포함

〈표2〉 전문경영인 지난해 연봉

이름	회사·직책	연봉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67억7300만원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62억1300만원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50억8900만원
정연주*	삼성물산 전 부회장	44억6000만원
이창규*	SK네트웍스 고문	41억2000만원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	39억7000만원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37억3000만원
박종우*	제일모직 전 대표	31억7000만원
이관훈*	CJ 전 사장	30억8000만원
이석채	KT 전 회장	29억7900만원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28억5000만원
최치준	삼성전기 사장	26억3800만원
고순동*	삼성SDS 전 사장	25억7000만원
손석원	삼성토탈 사장	24억3000만원
김영민*	한진해운 전 사장	23억9000만원
박상진	삼성SDI 사장	20억9000만원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	19억5000만원
이재경	두산 부회장	17억2000만원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16억7000만원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회장	16억2900만원

* *는 퇴직금 포함



농부의 따뜻한 마음이 들린다
〈나는 달걀 배달하는 농부〉 김계수, 나무를심는사람들

진유식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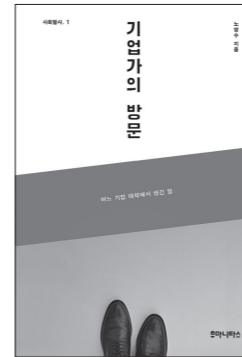
현대인들은 달걀요리를 많이 먹는다. 새우젓으로 간을 한 달걀 찜, 김을 가운데 넣어 돌돌 말아놓은 달걀말이. 달걀에 우유를 넣어 몽글몽글 익혀 먹는 스크럼블 그리고 순두부찌개에 넣은 노른자가 살짝 덜 익은 달걀을 뜨거운 밥에 넣어 쓱쓱 비벼 먹는 맛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의 식문화가 아닐까? 이러한 계란이 어떤 생산과정을 거쳐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리라.

이 책에서 지은이는 우리가 구입하는 상품인 달걀의 소중함과 생산과정의 복잡성, 그리고 물질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농부의 마음을 담고 있다. 글쓰이는 자신을 닭 백정이라 말하지만 이런 역할적 표현을 통해 닭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병아리 키우듯 아이를 키웠더라면’, ‘힘센 놈 기센 놈 애당초 약한 놈’ 등 소제목에서 글쓰이가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한 애정과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닭들에 대한 고마움이 물씬 느껴진다.

섬세하고 개성 있는 필치로 자신의 생각을 담담하게 그려내어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예리한 비판으로서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상업화 시대의 현실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적은 자본으로 최대의 이익을 내려는 자본의 논리로 아마존 원주민들의 삶을 황폐화 시키는 정유회사 쉘브론텍사코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돈의 마술에 걸려 작은 쉘브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본문구절에서 글쓰이가 지닌 반자본주의적 기질과 인간중심적 사고가 명백하게 확인된다.

이 책의 또 한 축은 귀농(귀촌)이다. 많은 도시인들은 각박하고 파편화된 생활에서 벗어나 낭만적이고 정취 있는 농촌으로의 귀환을 상상하며 지긋이 미소를 짓는 경우가 많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도저히 그런 생활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귀농의 기본 조건으로 자연에 대한 애정은 물론 우주의 섭리에 대하여 순응하고 만족할 줄 아는 생각과 몸이 갖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이른바 최고의 명문대를 나와 서울에서 13년 동안 교사의 삶을 그만두고 자신이 절실히 원하는 고향으로 귀농했다. 나고 자란 곳으로 되돌아갔음에도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하물며 도시에서 자연의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시계에 맞춰 살던 사람이 어떻게 자연의 시간에 순응하며 살 수 있단 말인가? 꿈은 그냥 꿈으로만~ **경**



순종하는, 사람이 미래다
〈기업가의 방문〉 노영수, 후마니타스

최승섭 부등산감시팀 부장 sub@ccej.or.kr

기업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은 손해배상 등 금전적인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도 다르지 않아 얼마전 코레일은 철도민영화 반대를 위해 파업을 진행한 노동자들에게 수백억원의 가압류와 징계를 선물했다. 이 책의 저자역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과 퇴학이라는 사기업의 횡포를 아이러니하게도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맞이하게 된다. 기자회견, 1인 시위, 총장실 점거,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마지막으로 3보1배까지. 책은 침묵의 시대, 취업난을 돌파하고 기업의 인재가 되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밖에 없는 대학에서 재벌기업의 침탈을 막고자하는 저자의 고된 싸움기이다.

중양대는 2008년 두산이 재단을 인수한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도 기업식으로 바뀌야 한다”는 두산그룹 회장(중양대 이사장)의 말에 따라 대변혁을 맞는다. 대학의 자치권은 철저히 유린 당했으며, 수많은 학생과 직원, 교수들은 뿔뿔이 흩어져 입을 닫고 재단에 굴복했다. 대기업의 혜택을 기대한 학생들도 많음은 물론이다. 서글프지만 두산이 중양대를 장악하지 않았다 해도 학생들은 스펙 쌓기에 열중했을 것이며, 학생회의 설자리는 작아지고 학생간 또는 교수와 학생간 유대감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미 대부분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그러하니 말이다.

말보다 행동이 몇 갑절 어렵다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있다. 그 어려운 저항을 저자와 동료들이 했지만 중양대에서 바뀐 것은 없다. 그들은 오늘도 대학을 기업화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개혁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자의 저항을 단순히 한 운동권 학생의 젊은 날의 치기로 기특하게만 보고 넘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그 답을 찾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와 함께 저항했던 한 학생의 자퇴선언문을 옮긴다. 대학을 사회로 바꿔 잃어도 맞아 떨어지는 그들의 외침을 모두가 듣길 바라며.

“내가 이 대학에서 배운 것은 정의를 꿈꿀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의 벽은 너무나 거대하고 완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때문에 그저 포기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를 고민하고, 경쟁을 통한 생존을 요구했다. 그렇게 대학은 세일즈하기 편한 상품을 생산하길 원했다. 하지만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나 또한 상품이 아니다. 난 결코 그들이 원하는 인간 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저항을 해보려한다.” **경**

“내가 이 대학에서 배운 것은 정의를 꿈꿀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의 벽은 너무나 거대하고 완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때문에 그저 포기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를 고민하고, 경쟁을 통한 생존을 요구했다. 그렇게 대학은 세일즈하기 편한 상품을 생산하길 원했다. 하지만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나 또한 상품이 아니다. 난 결코 그들이 원하는 인간 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저항을 해보려한다.” **경**

실현가능성에 주목한 'Good Enough Governance' 새천년개발목표와 거버넌스

이주하
경실련 국제위원회 위원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선언 후 15년 뒤인 2015년까지 국제사회는 MDGs를 성찰적으로 검토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Post-2015 개발의제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Post-2015 개발의제는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거버넌스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MDGs가 선진 공여국 중심의 원조 체제와 사회개발 목표 중심이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현물지원 방식은 현지 정부의 부패와 주민들의 의존성이라는 부작용을 파생시켰다는 비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례로 유엔고위급패널(UN High-Level Panel)과 국제NGO간의 협의체인 'Beyond 2015' 모두 Post-MDG시대의 주요 이행기제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과 함께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람직한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 등으로 번역되는 'good governance'와 비교적 좋은 거버넌스, 적합한 거버넌스 등으로 번역되는 'good enough governance'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굿 거버넌스 논의는 국가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일련의 규범과 원칙들을 제시해준다. 물론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가진 다면성만큼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역시 다양하다. 세계은행은 굿 거버넌스를 측정하기 위한 6개의 지표로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의 부재(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정부의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법치주의(rule of law) ▲부패의

통제(control of corruption)를 선정했다.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세계은행은 1996년부터 세계 거버넌스 지표(WGI, World Governance Indicator)라는 이름하에 각국의 거버넌스 수준을 측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유엔이 제시한 굿 거버넌스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의미하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participation) ▲법치주의(rule of law)에 기반한 의사결정 ▲정부활동에 있어서 투명성(transparency)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있어서의 형평성(equity) ▲공적

〈표1〉 발전주의 국가, 굿 거버넌스, 적합한 거버넌스

	발전주의 국가 Developmental state	굿 거버넌스 Good governance	적합한 거버넌스 Good enough governance
핵심 요소	국가능력과 배태된 자율성을 강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	정치·경제적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강조
정치 레짐 (regime)	많은 성공적인 발전주의 국가가 권위주의 체제였지만, 특정 정치레짐에 대한 규범적인 옹호는 없음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인 옹호 속에서 민주주의적 통치 강화가 주요 관심사	특정 정치레짐에 대한 규범적인 옹호는 없으며, 다양한 정치레짐의 요소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지지함
국가의 정당성	국가의 업적과 성취에서 파생됨	원칙과 절차적 측면에서 다수의 이익이 민주적으로 대표되고, 소수의 권리가 보호됨으로서 확보	다양한 국가들은 국가의 능력과 제도화 정도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정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당성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주어진 조건 속에서 고려되어야 함
국가의 역할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특정 사회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	역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으나, 시장/ 사회적 행위자에게 법치주의와 같은 체계를 제공	주요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개입하나 광범위한 이슈나 개혁을 동시에 다루지는 않으며, 개입의 전제조건을 중요시하고,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이 조절됨
주요 과제	비전을 갖춘 헌신적인 리더십을 육성하고, 국가적 목표를 위해 강한 단결력을 가지고 몰두하는 능력 위주의 공무원 조직을 확립	부패척결, 민주주의 심화, 공공재 정체계 개선 등과 같이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목표를 강조	바람직한 목표들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립되는 요소들 사이의 균형과 우선순위가 중요하며, 각국이 처한 현실적 상황에 기반한 활동에 초점

출처: Fritz & Rocha Menocal (2006) (Re)building Developmental States: From Theory to Practice, Working Paper No. 274, Lond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 지난 4월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새마을 운동 세계화 진단 토론회'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 ▲공공 및 민간조직들의 책임성(accountability)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곳 거버넌스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원조 공여국 혹은 세계은행 및 IMF가 수원국의 곳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명목 하에 심각한 자원 부족과 분쟁에 시달리는 개도국에게 과도한 규제를 요구하고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

다. 이에 메를리 그린들(Merilee Grindle)은 공여국인 선진국의 관점에 입각한 곳 거버넌스 담론은 수원국인 개도국에게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good enough governance(적합한 거버넌스)'개념을 제시하였다. 'good enough governance'는 수원국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실현가능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제·사회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원국의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수원국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는 곳 거버넌스 논의



▲ Post 2015 개발의제는 수원국 구성원이 결정과정에 참여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에 비해 덜 규범적인 동시에, 상황적 특성을 보다 고려하는 실용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론적이고 때론 이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버넌스의 기준보다는 주어진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에 한층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good enough governance'는 한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결과물에 주목하는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 논의와 공정한 게임의 룰에 주목하는 곳 거버넌스 논의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국 거버넌스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주요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인과 시장 및 시민사회의 자치역량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곳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재)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각 사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띌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실패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이후 국가의 한계점을 부각시킨 초기 거버넌스 논의와는 달리, 네트워크

와 파트너십의 기반 위에 '민주적' 국가의 능동적인 국정관리 능력에 주목하고 있는 거버넌스 담론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따라서 Post-2015 개발의제의 수립에 있어서 이와 같은 다양한 거버넌스 논의들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검**

※이 글은 경실련 주최로 지난 4월 23일 개최된 '새마을운동 세계화 진단 토론회'를 위해 준비된 토론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참고문헌은 이 글의 주요출처인 "국가중심적 거버넌스에 대한 시론적 연구"(국정관리연구, 2013)를 참조하길 바란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기리는 길



김유찬
경실련 상임집행위
부위원장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아직 세월호에서는 구조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은 희생자에 대한 간절한 애도의 감정으로 분향하고 있다. 슬픔과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은 그러나 세월과 함께 희미해질 질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기리자면, 드러나고 목격한 일에 대한 이성적 분노를 우리는 깊이 간직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라면 이러한 총체적 실패는 최소한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21년 전의 서해 훼리호 사건만 보아도 우리사회에서는 같은 실패가 되풀이 되고 있다. 이제는 표면적 분석과 정부의 전담부서 신설 같은 땀질식 처방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이러한 재난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처해나가야 한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정부가 보여준 무능한 모습 때문에서라도 정부가 이 일을 잘 해나가는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이 세월호 대책위원회는 여론 무마를 위해 빠르게 대책을 제시하려하기 보다는 수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건의 정확한 분석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안적 시스템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은 셀 수가 없다. 일본으로부터 중고품 배를 인수하여 구조변경하는 과정의 문제로부터 각종 안전장비에 대한 점검, 컨테이너 적재의 문제 등 사고를 유발한 요인들에서 시작하여 사고발생 후 선장 및 선원의 승객우선구조 의무태만, 출동한 해경구조대의 현장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처능력의 문제, 해경구조대 장비의 열악성, 관계부처간의 업무연계와 효율적 공조, 책임소재 불명, 재난 현장을 통제하는 지휘계통 불안정성 등 헤아릴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준비태세를 확실하게 갖추어야 한다. 재난의 성격별로 확실한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하고, 장비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난구조 전문인력의 확충과 매뉴얼 별 실제상황에 대비한 훈련체계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운업체의 안전 규정 준수와 이에 대한 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선박 및 구명장비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되고, 선원에 대한 재교육 및 감독, 그리고 항만기지와 운항중인 선박의 실시간 통신 및 통제시스템의 마련은 필수적일 것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그러나 반복된 해난사고로 완벽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의 안전운항에 대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즉 존재하는 안전운항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요소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세월호 사건의 반복을 막는 관건이라고 하겠다.

안전운항체계를 무력화시켜 세월호와 어린 학생들을 바다에 수장한 주역으로 이제 해피아들의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사회의 다른 분야에 도사리고 있는 모피아, 금피아, 세피아, 국피아 등 관피아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규제기관의 공무원들이 은퇴하면서 협회나 기업 같은 피규제기관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자리로 옮겨 간다. 이 퇴직공무원들은 결국 피규제기관에 포획되는 것이다. 좋은 대우를 계속 받기 위하여 후배 공무원들에게 피규제대상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눈감아주도록 로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당장에 제공되는 물질적 혜택과 은퇴 후의 취업기회를 감안하여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이 과정에 공공의 안전은 뒷전이 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피아들이 하부기관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차지하는 관행을 단절하겠다고 의지 표명을 한 모양이다. 반가운 말이지만 어찌 제대로 파악하고 하는 말인지 걱정이 된다. 지하경제양성화의 의지표명처럼 기대에 수십분의 일에도 못 미치는 결과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도 없이 또 다른 국가적 의제로서 세간의 관심을 몰아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관피아들의 문제는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의 인적교류의 차단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공적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 간의 업무영역이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기업의 대표들이 모여서 설립한 협회에 규제의 기능을 위임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고, 피규제기관들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평가 및 규제기관들(금감원, 회계기준원, 신용평가회사 등)의 재원조달의 문제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관피아들의 문제는 세월호의 희생자들을 만들어 낸 중요한 뿌리의 하나지만 언론에서 들추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범죄의 뿌리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들의 희생은 직접적으로 선장과 선원들의 직무태만으로 야기되었으나 이들의 태만한 행태를 근본적으로 조장한 역할은 기

업의 실질적 오너가 수행한 것이다. 6천톤급 배의 선장의 월급여가 270만원이고 선장과 승무원의 다수가 비정규직이었다. 안전장비의 교체도 회사는 거부하였고, 필요한 평형수도 기준보다 1000여톤을 덜 실으며 화물을 무리하게 적재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선원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였다. 사고가 발생하자 선장은 청해진해운대표와 통화하느라 승객구조를 위한 시간을 허비했다. 즉 선장이 현장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을 회사 측은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다.

회사의 대표는 실제적 오너인 유병언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 유병언이라는 기업오너의 브레이크 없는 사익 추구가 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이 자는 자식들의 지분을 통하여 실제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인건비로, 사진작품을 팔아서, 그리고 상표권을 팔아서, 제3자간의 거래라면 성립될 수 없는 폭리를 취하고 회사에는 껍데기만 남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선박 및 안정장비, 비정규직 고용을 통한 비정상적인 비용절감 없이는 회사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언론에 비추어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 개인들의 문제는 지적되나 이러한 개인들의 부당한 행태를 허용하고 방조하는 사회적 제도에 대한 인식은 아직 뚜렷치 않아 보인다. 시스템이 정당하게 작동된다면, 그러한 나라라면,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세법을 통하여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 부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쉽지 않다. 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언제부터인가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에서 기업오너들이 잘못하고도 빠져나갈 구멍은 점점 넓어지고, 공정해야 할 법원의 판결도 금력에 지배받게 된 지 이미 오래다. 대주주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면서 소액주주들과 다른 이해당사자들은 무시된다. 회사의 이익을 편취하면서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은 하수인인 명목상의 회사대표에게 넘겨버린다. 법적으로는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서 빗겨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간 극도의 불균형이 청해진해운에서만 있는 일이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출자자의 유한책임을 제도화한 자본적 회사제도의 확립은 큰 발전이다. 그러나 회사제도가 오래되면서 사익추구의 달인들이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려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국가와 입법권자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법을 수선해주어야 한다. 법제도는 모든 경제행위 참여자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균형적으로 부여되도록 수시로 조정되어야 한다. 입법부와 사법부에 로비스트들이 준동하면서 이러한 미시적 제도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경제는 정실자본주의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경**

갈증을 해소시켜준 '경실련 국제시민학교' 1기를 마치며

2014년 3월, 봄이 시작되고 4학년을 시작한 저는 졸업 후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왔던 것,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작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분야는 '국제개발협력'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문학이라는 제 전공은 개발협력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전문 분야가 아닌 인문학입니다. 때문에 제 주변에서는 개발협력 서적을 보는 것 외에는 체계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 이것이다'라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공식적으로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공여국 대열에 합류한 상태이며 시작한 기간이 5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국제사회 모범 기준인 GNI(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대비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자금 0.7%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2015년까지 0.25% 늘린다는 목표를 잡고 이제 막 열심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도 개발협력 담당팀을 만들거나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 개발협력의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처럼 개발협력 분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스스로 찾고 고민하며 현장에서 부딪혀보는 것으로 하나씩 알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던 중 '경실련 국제시민학교'가 4월부터 총 6주간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업(Vocation)을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신청하였고, 첫 주 프로그램에 와보니 저처럼 배움에 목말라하던 학생들과 실제 개발협력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까지 수강생으로 참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재운
국제시민학교
1기 수료생
한성대
한국어문학부



▲ 국제시민학교

‘경실련 국제시민학교’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개발협력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초청되었다는 점, 그리고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강연자 분들이 열정이 넘치는 답변을 해주신 점이었습니다. 특히 사전 접수를 받을 때 관심 있는 개발협력 대표

주체 네 개(공여국 기관, 국제기구, INGO, Local NGO)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수강생들 간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했다는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첫 번째 황원규 강릉원주대 교수의 ‘MDGs와 Post 2015 프레임으로 본 국제개발 패러다임’ 강연은 1,2차 세계대전부터 이어지는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알아보고, 왜 오늘날 국제개발협력이 뜨거운 감자로 자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큰 흐름을 잡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실련 국제위원장)의 ‘UN의 국제개발정책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체계적이지 못한 많은 원조로 인하여 발생한 원조피로와 그래서 중요해진 원조 효과성, 유무상 원조의 장단점, 국제개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등의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경연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원조 공여국 및 한국의 개발 정책에 대한 리뷰’에 대한 강연이었습니다. 대표 원조공여국인 영국과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북유럽 사례를 들어 대학의 국제개발학 분야의 모습들과 각 국의 개발 정책이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한재광 ODA Watch 사무총장의 ‘국제 NGO 및 한국 NGO의 개발정책과 활동 리뷰’ 강연은 우리나라 국제개발의 현 주소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NGO라는 단어보다는 CSO(시민사회단체, Civil Society Organization)로 용어를 바꿔야한다는 한재광 사무총장의 말씀에 그동안의 고정관념이 국제개발을 대하는 마인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정부의 국제개발 활동과 ODA자금에 대한 감시도 매우 필요하지만, 국제개발 현장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CSO들 역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한다는 것

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놓치거나 지나치고 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굉장히 유익한 강연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강연은 굿네이버스 전홍수 국제경영팀장의 ‘현장 활동가의 정책 활동 리뷰’였습니다. 수강생들이 앞선 네 번의 강연을 통해 국제사회의 패러다임과 아젠다, 정책, 파트너십 등에 대한 광의적인 차원에서 국제개발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마지막 강연에서 들려주신 2011년부터 올해인 2014년까지 르완다 카기나 지역에서 직접 실시했던 생생한 사례를 통해 그동안 들었던 많은 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론과 현장은 무엇이 다른지, 수원국 정부 및 주민들과 함께 성공적인 국제개발 사업을 하려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실련 국제시민학교’는 사전에 선택한 공여국 기관, 국제기구, INGO, Local NGO 등 4개의 개발협력 대표주체로 나누어 강연을 듣고 난 후 각자 주체의 성격에 따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모였던 5월 7일, 지금까지 진행했던 토론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주체가 ‘The World We Want’를 위한 Post-2015 아젠다를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강연을 들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Agenda Setting’이 실제로 주체의 성격에 따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가 다르고, 간략하고 측정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아젠다를 제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느꼈습니다. 주체별로 4~8개 정도의 Post-2015 아젠다를 발표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고, 발표 후 수료식을 진행하면서 4월 3일부터 시작한 6주간의 ‘경실련 국제시민학교’를 마쳤습니다.

글 처음에 밝힌 것처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생생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이 경우는 특히나 특성화된 분야들이 아닌 전공자들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때문에 ‘경실련 국제시민학교’의 한 주한 주 강연이 진행될 때마다 국제개발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폭넓고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경실련에 감사드리고, 특히 ‘경실련 국제시민학교’ 담당하며 수고한 정의정 간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멋진 미래에 저 역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길 더 선명하게 꿈꿔봅니다. **경**



생소한 단어, 개념은 친절하게 풀어썼으면

안세영
회원홍보팀 간사
sy@ccej.or.kr

지난 4월 10일 경실련 소회의실에서 열린 「월간 경실련」 모니터링단 2차 회의에서는 두 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의료영리화 등 전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이번 회의에는 이충희 회원, 김진철 회원, 송하동 회원과 함께 유애지, 박한, 정택수 간사가 참여했다.

표지를 본 소감을 말해 달라.

송하동 : 직관적으로 표현해서 기사를 안 읽어도 내용이 확 들어온다.

박한 : 마이클잭슨으로 비유한 ‘백스텝의 달인’ 이후로 재미있는 표지가 하나 더 나왔다.

도시인은 최근 규제완화로 도마 위에 올랐던 그린벨트 문제를 영국과 비교해서 다뤘다.

송하동 : 시의성이 좋았다. 그린벨트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리했다.

이충희 : 그린벨트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제하는 것이 좋지만 무분별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될 것이다. 생태보호를 위해 개방성과 불변성을 우선시하는 영국의 정책에 공감한다.

김진철 : 그린벨트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에 더해 경실련의 입장이 기사에 더 많이 반영됐다면 더 많은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정택수 : 하지만 객관적인 느낌의 글을 담는 것도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박한 : 입장이 슬며시 녹아있으면 좋겠다.

기획특집에서는 박근혜 정부 1년을 세부적으로 나눠 평가했다.

김진철 : 대통령 공약이행 30%가 적은 것인이라는 의문이 든다. 후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공약이 있는데, 평가가 너무 앞서지 않았다.

박한 : 박근혜 개인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에는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경실련이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있다.

이충희 : 복지공약 평가 토론회에서 국민 기초생활제도에 대해 다뤘는데 2011년과 비교해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10만명 줄었다. 23쪽 “국민기초생활제도 상대적 빈곤선 도입은 긍정적”이라는 제목은 이러한 관점에서 오해받을 수 있다.

송하동 : ‘상대적 빈곤선’이라는 용어설명이 자세하게 나왔다면 이러한 오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시사포커스1에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의사협회의 파업에 대해 다뤘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뭐가 다른가?

정택수 : 경실련에서는 의료영리화로 통일해서 쓰기로 했다. 기존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 무력화, 영리병원 도입 등 민영화정책을 추진했다.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현 정부의 정책은 영리화에 더 해당된다.

송하동 : 34쪽 “정부는 외부 투자를 제한하고 하지만 규제가 불가능하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정택수 : 인력지원, 장소임대 등 보이지 않는 투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 한 대형병원은 병원경영의 핵심부분만 빼고 대부분의 의료기기나 심지어, 병원건물까지도 임대로 이용하는데 임대료는 사실상 병원수입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만성적자라는데 누가 믿겠나. 자체 수입은 재투자하지만, 투자규제가 임의적이어서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영리법인과 다를 바 없다.

김진철 : 창원의 한 병원은 건물을 100%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리스로 장비를 교체하고, 임대료는 그에 맞춰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 돈을 세탁하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응급수술로 인한 수입보다 장례식장에서 얻는 수입이 더 크다. 병원과 장례식장에 대한 분리가 입법으로 필요하다.

이충희 : 충치 환자가 5개 치과를 찾아다녔는데 병원마다 다른 얘기를 하더라. 객관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병원 주차료가 하루 8만원이 들기도 한다.

정택수 : 지금도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영리화를 방어하는 규제마저 없

어지면 우리나라에서도 손가락 접합수술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나올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시행령을 바꿔 부대사업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시사포커스3에서는 2014년 경실련 사업계획이 실렸다.

이충희 : 주택문제가 심각하다. 경실련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줘야한다.

김진철 : 주택소유에 대한 분배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소유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 풍선효과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기사 다시읽기에서는 DTI와 LTV를 다뤘다.

송하동 : DTI, LTV 도입 목적은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다.

국제개발리포트는 새천년개발목표 6회 기획 중 두 번째로 평화담론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진철 : 사진에서 바로 중심내용이 다가와서 좋았다.

송하동 : 국가안보가 아닌 ‘인간안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새로워서 좋았다. 현장스케치에서 ‘초발심’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찾아보니 ‘처음으로 깨달으려는 마음을 돌이킴’이라는 불가용어였다. 흔히 쓰는 ‘초심’과는 비슷하지만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추상, 위계설법 등 잘 쓰지 않는 표현은 편한 단어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람시 개념’ 등 생소한 단어에 대한 친절할 설명도 잊지 않길 바란다. **경**

■ '철도노조원 해고 130명, 정직 251명, 손배 162억원, 노조계좌가압류 116억 철도공사의 노조 탄압에 대한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입장'을 읽고

@jeeny67 (4.1)

차라리 만우절 뉴스였음 좋겠습니다...

▶ 네, 저희도 같은 심정입니다.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더 독하게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grandno9)

■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및 사태수습 과정에 대한 입장'을 읽고

@yhchung56 (4.28)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번 사고는 인재중에 인재였다. 고령의 멍청한 선장, 청해진해운의 부실경영, 사고후 정부의 미숙한 대처 등등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고가 분명히 일어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쇠값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를 먼저 지키라고!!!

▶ 경실련에서는 향후 단기적으로는 세월호의 진상규명 및 관련자 문책, 유가족피해보상 문제,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국가 구조적 문제, 즉 부패 고리(공직자 재취업, 관피아 등) 척결, 법제도개선(해사안전 및 선박관련 법개정, 안전시스템 개선,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의 활동을 통해 큰 틀에서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권오인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daebak_ohin)

■ '서울시 호텔이용률 78.9% 객실여유 많아! 향후 호텔과잉공급 우려도'를 읽고

@odeo2487 (4.15)

오피스텔 공실도 많답니다. 이게 다 자원인데 기존 자원 이용해서 활성화 시킬 생각은 없고 그저 대기업이 새로 건물 짓는 거에 뒤나 봐주려하더니.

▶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적하신대로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의 공급과잉 우려도 큼니다. 도시내 무분별한 건축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오세형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간사(@dipsec)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사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news@ccej.or.kr | 트위터 @cyberngo | 전송 02-741-8564~5



신입회원 한마디 "반갑습니다! 회원님"

김경준 | 시민의식이 지켜지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지수 | 공공갈등에 있어서 경실련 갈등해소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환 | 지속적인 국가사회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박원규 | 정치, 경제민주화를 위해 힘써 주세요^^*

박준형 | '누구나 노력한 만큼 대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문구가 공감이 됩니다. 문구처럼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후원합니다.

박지혜 | 이대로 분노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무섭습니다. 작게나마 응원합니다. 힘내주세요.

신동기 | 상식이 통하는 사회, 주민이 행복한 사회

이영연 | 시민사회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늘 생각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체계화된 건동의 단체라고 나를 판단하여 가입합니다. 조정래 선생님의 "who am I" 강연을 듣고 각성이 되어 생각만 하고 있던 일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무자비하게 확대되어 가는 재벌과 부패권력의 횡포로부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지켜나가는 절대적인 필요 존재로 경.실.련과 같은 단체가 존속되는데 미약한 힘이 되고자 합니다.

양부식 |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정영규 | 북한을 붕괴시켜 통일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후유증이 있을 것입니다. 민족공동체 의식을 높여서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협회의 활약에 많은 기대를 갖고 참여하겠습니다.

주정운 | 밝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 원합니다.

최병찬 |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바른 사회를 이루기 위해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서 참여합니다.

최영진 | 지난 시간 변화되어온 부산보다 더 변화되고 발전되어지는 부산의 모습을 함께 일구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2014. 05

05.22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④강원도지사 5.24조치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 한국시민네트워크' 발족식 ▶사진1



사진1

05.21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③충남도지사

05.19 [관피아 시리즈2] 재난안전 관련 출신 공무원(안(安)피아)의 민간협회 취업현황 조사결과 "청와대·내각 등 인적쇄신 없이 세월호 사태 수습 어렵다"성명 발표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①부산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②대전시장



사진2

05.15 '전방위수사란 말이 무색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중간수사발표' 성명 발표 주요 라면 GMO표시실태 결과발표 및 식약처 등에 GMO포함여부 조사요청

05.14 "동아제약 조건 불이행,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한다" 성명 발표

05.12 [관피아 시리즈1]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해(海)피아)의 민간협회 취업현황 조사결과 발표

05.09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추진에 대한 논평 발표

05.08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 제기 ▶사진2



사진3

05.02 "복지 실태조사에 근거한 장기요양 수가협상과정을 마련하라" 성명 발표

05.01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정보인권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한 국회 규탄 성명 발표 동의없는 개인정보공유 허용한 「금융지주회사법」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

2014. 04

04.28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 채택 환영 입장 발표

04.29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일만오천배 개최

04.28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구조와 지원에 적극 나서라" 성명 발표 "한·미,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법 제시해야" 성명 발표



사진4

04.27 인권위에 개인정보공유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권고 촉구

04.23 새마을운동 세계화 진단 토론회 ▶사진3

04.22 문용린 서울 교육감 공약 미이행률 60%, 공약이행 평가 토론회

04.16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저지를 NGO 연대 토론회 ▶사진4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상정에 대한 입장 발표
현 주택상황과 동떨어진 한국감정원 가격동향 표본 분석 결과 발표



사진5

04.15 드레스덴 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방향 토론회
서울시 호텔 실제 이용률 78.9% 조사결과 발표
건설업 업역구분 특혜규제 철폐 및 직접시공제 전면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하고 특검 도입으로 전면 재수사해야" 성명 발표
서울시의 교통카드 현황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사진6

04.14 경실련 2014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사진5
잘못된 규제개혁 10대 사례 발표

04.10 금강산관광 중단 6년, <금강산관광 재개, 그 해법은?> 열린좌담회 ▶사진6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거품 전가로 가계부채 심화시킬 것" 성명 발표
"연간 임대소득 44조 불로소득화 방지, 철저한 임대소득세 도입필요" 성명 발표



사진7

04.09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촉구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의에 대한 입장 발표

04.08 삼성 특허 방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 ▶사진7
"경쟁촉진 내세워 사회적 경제 무너뜨리는 공정위" 성명 발표
방통위에 피해입증자료 제공거부 KT 시정조치 요구

04.04 동양증권 주주대표소송 제기
경인운하 터키공사 담합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

04.03 "박 대통령, 정당공천 폐지 명확한 입장 밝혀야" 공동성명 발표

04.02 재벌특혜 위한 편법적 호텔건립추진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 ▶사진8
개인정보 근본대책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사진8

04.01 "비등기 재벌 총수의 연봉과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성명 발표

2014. 03

03.30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 북한의 호응 이끌어내야" 성명 발표

03.27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 ▶사진9
철도공사의 노조 탄압에 대한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입장 발표
"정부는 엉터리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발표를 중단하라" 성명 발표



사진9

03.26 박근혜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과 규제 폐지시도에 대한 입장

03.25 원격의료허용 국무회의 통과 규탄 기자회견
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 촉구 입장 발표

* 경실련의 모든 성명 및 발표자료는 경실련 홈페이지 (www.ccej.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 신입회원 154명, 가입일: 2014년 3월 19일~2014년 5월 16일)

(주)케이알티	김기범	김정혜	남상진	박세인	변한주	양남열	이동석	이흥록	정원모	최석남
강은희	김말순	김종관	남영현	박순재	서경석	양부식	이동훈	임승기	정윤희	최성희
강태운	김명석	김주란	남흥우	박영환	서경호	양언석	이수연	임양희	정주영	최영미
강희원	김미경	김주연	노남수	박원규	서미연	양정규	이수영	장경민	정지훈	최영진
고석만	김미녀	김자수	노동식	박준대	서보혁	양해준	이승대	장보름	정현우	최재원
고정운	김병우	김지호	노희철	박준형	서상기	염기명	이승재	장형순	조광제	최창규
곽상원	김선희	김진철	리용일	박지혜	서홍기	오경서	이영선	전세표	조민영	최희원
권기억	김성자	김진희	류규식	박지호	손재복	오영환	이은열	전이령	주석환	탁동철
권도형	김수정	김찬형	박명규	박진규	송창섭	우성	이익창	전찬영	주정은	한민승
권중식	김수한	김 현	박미정	박춘선	송필수	유철우	이재훈	전현중	주헌자	홍진구
김 철	김애란	김현선	박민영	박현일	신동기	윤경이	이정현	정병호	지승익	황무수
김간구	김연중	김혜순	박성범	배권식	신동준	윤은선	이제우	정보경	최대웅	황보해웅
김경준	김원일	남대우	박성배	백인용	이름다은의원	윤일성	이종실	정봉재	최대훈	황영석
김균률	김장철	남민화	박성진	백중철	안동찬	이남경	이형민	정연규	최병찬	황인섭

본부	고경일	권민일	김대중	김 상	김영실	김인선	김지연	김평진	나병현	문장협	박수행	박중수	배영기
그리스(2014.2.24)	고동성	권준기	김대현	김상경	김영애	김인숙	김지영	김하나	나판수	문종원	박수형	박중원	배영환
한국경제(2014.3.13)	고승일	권준석	김대호	김상균	김영은	김인영	김지혜	김학수	남기원	문태원	박준규	박중태	배유근
(주)동신인개발	고영희	권준우	김대훈	김상균	김영재	김인영	김지혜	김하나	남상권	문호준	박순기	박주은	배유아
피터엘리트스텍	고은진	권 찬	김도준	김상열	김영주	김인태	김지호	김해성	남석준	문 희	박순우	박준수	배인명
브이앤브이(주)	고인수	권철민	김도형	김상영	김영주	김인호	김진구	김해숙	남영진	민남미	박승상	박준영	배장수
고고하우스	고지석	권태환	김도희	김상우	김영준	김일수	김진만	김해남	남현호	민병욱	박승욱	박준형	배중석
군산경실련	고진강	권해수	김동구	김상중	김영준	김일수	김진영	김행선	남현주	민선우	박승진	박준철	배화숙
고행산	고형산	권혁민	김동규	김정철	김영철	김재구	김진수	김현동	남호원	민승현	박양제	박지은	백경아
가상존	고형서	김재호	김동균	김생수	김영철	김재구	김진아	김현덕	남호현	민희숙	박영규	박지호	백복수
강경수	고희은	김진배	김동운	김석환	김완래	김재길	김진영	김현서	노경택	박건영	박영규	박지호	백은정
강국신	공병욱	김진일	김동욱	김선자	김완배	김재일	김진욱	김현성	노관숙	박경애	박영기	박지환	백정숙
강내원	공정표	김경모	김동현	김선필	김완옥	김재하	김진현	김현수	노동식	박교영	박영남	박진규	백중철
강대욱	공진하	김경배	김동호	김선희	김완식	김재환	김진호	김현욱	노연경	박교빈	박영민	박진순	백진현
강덕순	곽기훈	김경수	김동환	김성균	김용남	김정돈	김진호	김현정	노영수	박기영	박영수	박진홍	변동철
강명구	곽남준	김경수	김득기	김성수	김용득	김정수	김찬기	김현주	노우호	박기철	박영웅	박진영	변상해
강문희	곽세별	김경웅	김만수	김성수	김용석	김정신	김찬동	김현주	노원경	박기훈	박영철	박창민	변재근
강민구	곽지용	김경운	김민호	김성식	김용섭	김정현	김찬석	김현준	노재훈	박진규	박영환	박준섭	변준섭
강병국	곽효석	김경준	김면중	김성연	김용숙	김정일	김찬형	김형규	노경호	박남수	박용석	박철수	사동천
강병희	곽희남	김경호	김영균	김성일	김용식	김정중	김찬호	김형균	노진주	박노건	박우룡	박치권	서동일
강상구	구경이	김경호	김명기	김성중	김용준	김정하	김창균	김형원	노태균	박노현	박우석	박지우	서미연
강신미	구민진	김경환	김영득	김성진	김용직	김정하	김창범	김형조	노희철	박태만	박우희	박지우	서순탁
강성주	구성찬	김경희	김영숙	김성태	김용진	김정호	김창식	김형준	단호섭	박두영	박은아	박태선	서순환
강신우	구수정	김관영	김명애	김성필	김용찬	김정호	김창환	김형진	라운름	박미나	박은준	박한용	서영덕
강연화	구수경	김관용	김명인	김세운	김용철	김정호	김 창	김해경	류경수	박민기	박은현	박한호	서영상
강영식	구지용	김경운	김명철	김세진	김용철	김정훈	김천석	김해연	류동훈	박민정	박은순	박행우	서한석
강영철	구해인	김국주	김명환	김소라	김용태	김정길	김천중	김해숙	류명현	박민준	박의경	박현일	서용욱
강원호	권경무	김기해	김무준	김승철	김용하	김정근	김 철	김해순	류시문	박병근	박의용	박현진	서운석
강은현	권구혁	김구범	김문환	김수영	김용호	김종덕	김철주	김혜영	류연희	박병오	박이규	박형근	서은경
강일철	권규항	김규범	김미경	김숙희	김우비	김종록	김철홍	김 호	류종길	박병오	박형산	박형진	서정일
강재현	권동현	김규훈	김미진	김승희	김우빈	김종목	김철환	김효경	류지성	박보미	박인선	박혜란	서중대
강정희	권득용	김근상	김민섭	김시영	김원서	김종민	김창아	김효균	류충렬	박상대	박재갑	박호걸	서중철
강주현	권봉철	김근수	김민수	김애자	김원태	김종배	김충환	김효성	류형욱	박상필	박재완	박호영	서지원
강지영	권상용	김근철	김병각	김양규	김우룡	김종섭	김치수	김효선	류화근	박상성	박재익	박홍순	석기영
강진영	권상주	김기숙	김병구	김양수	김유진	김종숙	김태균	김효연	마미영	박상성	박재천	박후근	석철수
강창길	권성운	김기열	김병성	김양수	김유찬	김종수	김태수	김효관	맹성렬	박상혁	박재교	박 훈	선동수
강창구	권소영	김기형	김병수	김양진	김유찬	김주남	김태수	김홍권	맹주철	박선희	박정민	박휘영	설현식
강창균	권순범	김남덕	김병수	김연주	김유환	김주영	김태완	김홍규	문경식	박성배	박정서	박희돈	설장민
강철수	권순용	김남선	김병수	김연주	김윤기	김주영	김태용	김효선	문광기	박성용	박정식	박희선	성광식
강태경	권영진	김남훈	김병화	김영미	김윤태	김주준	김태현	김후성	문미란	박성혁	박재호	반철진	성병화
강혜정	권영한	김달환	김병호	김영범	김윤희	김준서	김태현	김희규	문순준	박성훈	박재화	방삼윤	성 신
강홍천	권오진	김대균	김보경	김영복	김은영	김준서	김태형	김희영	문석진	박세원	박준근	방정혜	성원규
강민수	권유규	김대선	김복환	김영선	김의도	김준영	김태호	김희철	문세영	박세훈	박중수	방중수	성윤숙
개초미	권은희	김대성	김봉근	김영선	김의수	김준한	김태훈	나건일	문수상	박수경	박준선	배민병	성종규
고상석	권율화	김대우	김부경	김영순	김인근	김종기	김태훈	나명희	문인섭	박수완	박중소	배승철	소경섭

소진성	안병노	원홍식	이광섭	이상현	이은재	이화영	전창호	정태준	채준하	최희준	황선원	백은정	김재천
손건일	안병화	유관영	이광용	이상희	이의영	이화주	전지현	정태철	천기용	추동균	황신영	백인길	김진환
손무길	안상용	유관준	이광철	이석교	이의모	이 훈	전창훈	정한균	천대웅	추호현	황신준	서민호	김학성
손병권	안영호	유기석	이광택	이석규	이인영	이훈섭	정경수	정해서	천민승	탁 민	황영미	신행숙	김희만
손봉호	안영훈	유기선	이광필	이석기	이일권	이훈복	정경우	정학제	천병우	하상준	황국분	심영길	노규남
손성일	안완용	유기찬	이광현	이석범	이재간	이희중	정권용	정해경	천승걸	하용호	황유경	양우현	김명숙
손승태	안용식	유기청	이규용	이석제	이재걸	임건록	정기만	정해승	최갑주	하태주	황운근	오세형	류길재
손재운	안인화	유기현	이규용	이산신	이재필	임명호	정남운	정해진	최광규	하현아	황이남	원민철	류현정
손정아	안정혜	유남식	이규철	이선태	이재운	임세운	정덕임	정희성	최광현	한광덕	황이숙	유영모	문행규
손중보	안중복	유덕열	이근식	이상계	이재운	임승기	정미숙	정희창	최근욱	한기훈	황인선	이동근	박익리
손호중	안중환	유동진	이근식	이상계	이재운	임승기	정미숙	정희창	최기환	한동운	황인선	이동근	박성극
손희경	안지현	유동훈	이근대	이상규	이재환	임용기	정범석	조강희	최낙훈	한상룡	황정우	이만희	박순장
손희준	안진걸	유병서	이근행	이상규	이재훈	임용섭	정범석	조광현	최다정	한상훈	황정일	이명수	박영희
송기민	안진호	유성하	이금희	이상규	이정남	임정원	정범순	조광희	최덕호	한석용	황철연	이병준	박용주
송기성	안철원	유영춘	이기승	이상복	이정남	임정규	정범순	조규홍	최규홍	황철연	황철연	이순배	박용현
송명원	안현규	유인상	이기우	이상욱	이정현	임종필	정삼룡	조민숙	최동욱	한승구	황철연	이양재	박은주
송미영	안호정	유인환	이기용	이상재	이정희	임종혁	정서희	조병익	최명희	한승호	황철연	이유미	박주승
송병록	안희숙	유일용	이기중	이상학	이정희	임정민	정선혜	조상호	최명호	한승호	강순주	이은재	박주승
송수영	안희철	유장영	이기원	이상영	이정희	임태영	정선혜	조성태	최병찬	한용석	강준우	이재문	백인교
송영호	안희희	유재민	이나원	이상영	이종진	임태영	정선혜	조성태	최병찬	한우진	고일두	이정식	백학순
송용석	양대규	유재욱	이다혜	이소현	이종규	임호민	정세진	조성희	최봉문	한철희	곽 도	이재선	변상호
송원기	양대순	유재중	이다영	이소수	이종길	임희청	정세훈	조순열	최석준	한홍열	곽충삼	이주희	서준석
송철주	양두서	유재혁	이덕희	이수연	이종욱	장경만	정승우	조명정	최성실	함동균	구영환	이창수	서보혁
송인섭	양보람	유중성	이종근	이수연	이종윤	장경태	정승우	조영록	최성실	함동균	구지훈	이현주	손세창
송인우	양부시	유평준	이동서	이수영	이종은	장동민	정승준	조용기	최성현	함형욱	권영진	이희승	신경화
송태교	양비화	유해신	이동서	이수진	이종후	장민수	정승화	조은숙	최수진	허병진	권 일	김경희	안준환
송하동	양세동	유항일	이동서	이순기	이종후	장병호	정연준	조은숙	최수진	허병진	권 일	김경희	안준환
송호영	양승우	유희숙	이동주	이순배	이주하	장삼기	정연준	조은호	최순성	허석	김광만	임형백	이원희
신경희	양연식	윤건수	이동준	이승기	이주하	장삼기	정연준	조은호	최순성	허수범	김금옥	정영진	이기자
신규철	양원표	윤경숙	이동준	이승섭	이준길	장석림	정연만	조일홍	최일홍	허여령	김기성	전은호	이명자
신근택	양원숙	윤대현	이동준	이승용	이준영	장성준	정영수	조재원	최영수	허익배	김대용	정성훈	이승규
신동기	양인준	윤동열	이동한	이승현	이희현	장성진	정영수	조재원	최영수	허익배	김덕기	정애리	이우영
신동식	양창우	윤상균	이동현	이승현	이희현	장성진	정영수	조재원	최영수	허익배	김덕기	정애리	이우영
신동조	양태훈	윤석원	이동호	이신호	이희현	장성명	정용찬	조종철	최영철	허지영	김미경	최강림	이철호
신동진	양혁승	윤성권	이동호	이이리	이진경	장영달	정용택	조준범</					

임기수	전세식	정 철	채희관	허성만	김순옥	여근자	조성자	김태희	장성숙
임기중	전용철	정충선	최각규	허 영	김승현	윤성중	최영진	김현철	장정선
임동현	전용표	정대홍	최경호	허장권	김용재	윤준형	최충익	김현희	전극중
임성진	전우석	정해영	최광민	현상주	김정연	유영호	최희수	나기합	정은미
임성총	전재복	정현순	최대철	형미희	김정호	유재원	하상준	나창호	정대명
임용수	전희택	정희승	최맹섭	홍강희	김정현	윤장혁	한광수	남공진	정 휘
임용현	정경수	조경주	최명용	홍경선	김종범	윤재경	한희민	남승국	조동욱
임윤희	정교순	조국현	최선미	홍석원	김종식	윤재선	함태성	박상조	조송이
임은정	정 균	조동순	최성희	홍성학	김준순	윤택우	허영준	박영태	조용석
임의순	정미선	조성구	최승민	홍성학	김평안	윤학로	황덕호	박임성	주경돈
임일남	정미화	조성오	최영선	홍승표	김한택	이관행	황윤선	박종대	최홍수
임일수	정상섭	조수중	최영중	홍우표	김해경	이대범	황해숙	서윤기	최병문
임재규	정상신	조승연	최운정	홍용표	김희성	이복연	이상선	손승수	최재용
임재일	정상완	조윤행	최은실	황동훈	박도수	이상철	강창식	양기정	최희수
임종승	정성희	조은애	최진안	황락훈	박상규	이석원	권오일	양정희	하승환
임차남	정세웅	조을선	최종진	황선건	박상렬	이원규	권태석	유재준	허태구
임한빈	정승희	조이현	최태호	황성주	박정근	이은영	권태훈	윤해정	
임현경	정영래	조정식	최현숙	황희연	박형일	이인배	김대영	이동철	
임혜숙	정영섭	조항진	최형도		방명열	이재진	김동완	이동훈	
장경석	정영희	조한상	최형익	춘천경찰서	방수미	이종민	김문규	이상윤	
장남운	정우영	조형규	최호균	춘천상공회의소	배은수	임재선	김미경	이수철	
장병대	정우철	주서택	홍경섭	고태규	배 준	전규호	김상수	이영철	
장병순	정은경	주서규	홍재성	권용범	변용환	전근우	김성희	이욱재	
장병희	정은희	주재구	한기억	길정숙	변좌용	전만식	김수구	이운용	
장선배	정인수	주진영	한상화	김광배	변지량	전성취	김장수	이원탁	
장영건	정일기	주홍식	한수환	김기남	석영기	전양호	김재철	이익창	
장재봉	정일택	지동규	한은래	김남철	손현기	전운성	김종윤	이정미	
장호진	정재량	지 민	한익돈	김대영	송창근	전호성	김준태	이정은	
장홍원	정지성	지의경	한인섭	김동수	신길호	정지만	김진두	이지은	
전광호	정진아	진경수	한정훈	김범철	신해춘	정종도	김진석	임미진	
전년규	정진원	차종범	한석현	김석중	안호춘	정휘동	김태석	임영숙	
전병선	정진하	채명석	허석렬	김선배	양태식	조성모	김태현	장병화	

중앙경찰서

사무총장	766-5626	고계현	(사)경제정의연구소	766-5625	간사: 정지영
기회·홍무팀	741-8566	사무처장: 윤순철, 부장: 채준하, 간사: 권태환	(사)경찰서협의회	766-5624	간사: 홍영근
회원·홍보팀	744-0400	간사: 안세영, 최예지	(사)경찰서도시개혁센터	766-5627	간사: 오세형
경제정책팀	3673-2141	팀장: 김한기, 부장: 이기웅, 간사: 정재욱	(사)갈등해소센터	742-5941	소장: 이강원, 간사: 박한
정치입법팀	3673-2145	팀장: 김상수, 간사: 유애지	시민권익센터	3673-2146	팀장: 윤철환
사회정책팀	3673-2142	팀장: 남은경, 간사: 정택수	소비자정의센터	765-9732	간사: 박지호
국제팀	766-5623	간사: 정익정, 수습간사: 이현아	미디어워치	3673-2143	
부동산감시팀	766-9736	부장: 최승섭, 팀장: 김성달(육아휴직)	월간 경찰서	766-5629	이사: 음유정, 김용재
국책사업팀	766-5628	팀장: 권오일			

지역경찰서

지역경찰협의회	031-253-2266	운영위원장: 박원기	충청권		
광역시			천안·아산경찰서	041-552-2040	국장: 정병인
광주경찰서	062-528-4851	처장: 김기홍, 부장: 강경민, 김세현	청주경찰서	043-263-8006	처장: 최윤정, 국장: 이병관, 간사: 김태희
대구경찰서	053-754-2533	처장: 조광현, 부장: 최은영	강상권		
대전경찰서	042-254-8060	처장: 이광진, 협동처장: 차정민, 국장: 이현호	거제경찰서	055-637-9451	간사: 박희자
부산경찰서	051-761-3951	사무처장 대행: 이훈진	창원경찰서(준)	055-263-0030	장책위원장: 이지영, 국장: 오정환
인천경찰서	032-423-2950	팀장: 윤정선, 김미라, 간사: 배성훈	경주경찰서	054-773-7851	국장: 이원희, 간사: 방현주
경기·강원권		처장: 김승현, 국장: 최해자, 김선희	구미경찰서	054-453-1787	국장: 조근래
경기팀	031-253-2266	처장: 박원기	포항경찰서	054-278-4637	국장: 장정선
광명경찰서	02-2614-1224	국장: 허정호, 부장: 허창순	울릉지회	054-791-0085	국장: 김유길
군포경찰서	031-392-3111	국장: 오은정	전라·제주권		
수원경찰서	031-253-2266	처장: 박원기, 정책실장: 노건형, 간사: 유병욱	순천경찰서	061-751-9993	국장: 이상희
안산경찰서	031-402-6116	국장: 김경민, 부장: 고선영, 간사: 최윤정	여수경찰서	061-643-2110	차장: 박호준
안양·의왕경찰서	031-443-6730	처장: 김성준	목포경찰서	061-283-4571	국장: 장미
김포경찰서	031-997-0044	국장: 이상준, 간사: 황인순	군산경찰서	063-443-5733	국장: 최기자
이천·여주경찰서	031-635-7575	국장: 주상운, 간사: 변정혜	전주경찰서	063-273-4903-4	국장: 한병규, 간사: 권미경
강릉경찰서	033-645-0828	국장: 심현섭	정읍경찰서	063-536-6225	간사: 김은영
속초경찰서	033-636-6631	국장: 김경석, 부장: 김미정	남원경찰서	063-633-6662	
춘천경찰서	033-241-9486	처장: 권용범, 간사: 오연옥	제주경찰서	064-726-2530	처장: 좌광일

백태수님의 '기억'



생각보다 우리 주변엔 노란 물건이 참 많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희생자 뿐만이 아닙니다.

노란 물건을 볼 때마다, 희생자를 애타게 기억해야 합니다.